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66-10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한민국 정부

목 차

제 1 부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실효성 / 3
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 5

제 2 부 ▌ 2016~2020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 13
2. 재정운용 여건 / 15

제 3 부 ▌ 2016~2020년 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21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23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41

제 4 부 ▌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1. 보건·복지·고용 분야 / 53
2. 교육 분야 / 77
3. 문화·체육·관광 분야 / 89
4. R&D 분야 / 103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115
6. SOC 분야 / 127
7. 농림·수산·식품 분야 / 137
8. 환경 분야 / 149
9. 국방 분야 / 158
10. 외교·통일 분야 / 167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 174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190

제 5 부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1.「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1)「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배경 / 201
2)「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주요 내용 / 202

2.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1) 지출 구조조정 / 203
2) 유사·중복 통폐합 / 204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206

3. 세입기반 확충

1) 비과세·감면 정비 / 209
2) 지하경제 양성화 / 211
3) 과세기반 확대 / 212
4)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 213

4. 재정관리체계 개선

1) 지방재정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 215
2)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 217
3)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 220
4) 공공기관 기능조정 / 222
5)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 225

5. 재정누수 차단

1) 집행현장조사제 실시 / 227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28
3) 통합재정사업 평가 강화 / 231

제 1 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실효성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 계획을 말한다.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 제시

국가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매 년도마다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배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가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도 중요하다. 단년도 위주의 예산 편성만으로는 국가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개년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동계획으로서 계획 수립 이후의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수정 및 보완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에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2007년부터「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3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3년「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경과년도인 2014년은 100일전에 제출하였고, 2015년은 11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였다.

전략적 재원배분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

우리나라는 2004년에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롯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을 도입하면서 제도적 측면에서 선진 재정운용시스템을 구비하게 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과 발전으로 기존 단년도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거시경제 및 재정여건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운용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전략적인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 최초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발전되어 왔으며 2010년 5월「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와 유사한 체제와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수입을 국세·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세분화하였고, 통합재정수지의 전망, 근거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년도 계획 대비 변동사항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는 재정지출을 의무·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지출성격별로 전망근거와 관리계획 등을 제시하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도 첨부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에 있어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재정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각 부처에 계획 수립지침 통보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2015년 12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각 부처는 동 지침에 따라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6년 1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분야별 작업반 운영 및 공개토론회 개최

2016년 2월부터 정부, 학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8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정책방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6년 5월 20일에는 재정개혁, 일자리, 지방재정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2016년 8월 23~25일에는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 및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외부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국회 보고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2016년 8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8월 26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였다.

2017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 제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었으며, 2017년 예산안과 함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 공개토론회 개요(2016.5.20.)

○ 정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총괄, 재정개혁, 일자리, 지방재정, 일자리, 농림, 문화 등 6개 분야 주요 재정이슈에 대해 논의하였고, 분야별 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 대학생 등이 참여하였다.

※ 2016년 공개토론회 분야별 토론주제

분 야	토론주제
총괄	• 2016~2020년 재정운용방향
재정개혁	•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 중심으로
지방재정	•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일자리	•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강화방안
농림	• 정부양곡 재고량 및 재고비용 축소방안
문화	• 고부가가치 문화산업 육성방안

▣ 주요 논의 내용

○ **총괄 분야**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역할과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 또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리와 유사한 경제·재정여건 하에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연금·재정개혁을 추진했던 과거 스웨덴의 개혁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중장기 시계에서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 **재정개혁 분야**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 **지방재정 분야**는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 칸막이식 운영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데 공감하고,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자체 전출금의 규모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일자리 분야**는 청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확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토론에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유인하는 '청년취업 내일 공제' 확대,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 연계

○ **농림 분야**는 쌀 재고량 과다로 관리비용이 급증하여 재고량 감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쌀 공급 과잉의 구조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생산·수요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 **문화 분야**는 콘텐츠·관광산업간 연계, 가상현실 콘텐츠 등 신시장 창출의 중요성과 함께, 구직자의 눈높이와 산업계의 수요 불일치 등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해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발전과정

▣ 1982년부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기재정계획 작성

○ 정부는 재원배분에 있어 중기적 시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2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였다. 초기의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적자 전망이나 적자축소 계획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고, 예산편성 시 재정당국의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제도화

○ 2004년에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06년「국가재정법」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동 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 정부는 경제·재정여건을 전망하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5년 단위 재정총량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12대 분야별 중점투자계획 및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전까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포함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 2005년부터는 일반회계 등 예산 중심에서 예산과 기금을 망라하는 총지출 기준으로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계획 수립과정에서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정책고객, 관계부처,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계획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이와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제시하는 중기 재원배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재정소요를 분석하고 단년도 예산의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해설 |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내용

▣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재정총량 관리 강화

○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재정운용의 중점을 두었다.

○ 성장률 조정 및 세입경정 등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응하여, 총지출 증가율을 2014~2018년 계획보다 하향 조정하였다.

○ 이로 인해 재정수지는 2015~2019년 계획기간 중 단계적으로 개선되어 2019년에는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0.9%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성장동력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 투자

○ 재원배분 측면에서는 경제활력 제고와 노동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하여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 아울러, ICT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 빅데이터 등 미래 성장엔진 육성을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

(단위 : 조원, %)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 증가율
▪ 재정수입	382.4	391.5	406.8	426.6	446.6	4.0
- 국세수입	221.1	223.1	233.1	244.2	255.6	3.7
▪ 재정지출	375.4	386.7	396.7	406.2	416.0	2.6
▪ 재정수지	△33.4	△37.0	△33.1	△25.7	△17.7	
(GDP 대비, %)	(△2.1)	(△2.3)	(△2.0)	(△1.4)	(△0.9)	
▪ 국가채무	595.1**	645.2	692.9	731.7	761.0	
(GDP 대비, %)	(38.5)**	(40.1)	(41.0)	(41.1)	(40.5)	

* '15년은 본예산 기준 / ** 단, '15년 국가채무는 전망치 기준

용어해설 | 우리나라 재정의 회계구조(2016년 기준)

▣ 우리나라의 재정은 예산(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과 기금(65개)으로 구성

○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는 국세 등 일반 세입으로 경제개발, 복지, 교육, 국방 등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는 회계이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 특정 자금 운영, 기타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회계이다.

○ 기금은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 특정 자금을 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 재정의 회계구조 >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예 산</td><td rowspan="2">기 금</td></tr>
<tr><td>일반회계</td><td>특별회계</td></tr>
<tr><td>개수</td><td>1개</td><td>18개</td><td>65개</td></tr>
<tr><td>규모</td><td colspan="3">총지출 386.4조원</td></tr>
<tr><td>내용</td><td>
<table>
<tr><td>세입</td><td>세출</td></tr>
<tr><td>▪ 내국세
▪ 관세
▪ 교통세
▪ 교육세
▪ 종합부동산세
▪ 세외수입</td><td>▪ 사회복지
▪ 교육
▪ 교통및물류
▪ 국방
▪ 일반지방행정
▪ 농림수산식품등</td></tr>
</table>
</td><td>
<table>
<tr><td>기업특별회계(5개)</td><td>▪ 양곡관리
▪ 조달
▪ 책임운영기관
▪ 우편사업
▪ 우체국예금</td></tr>
<tr><td>기타특별회계(13개)</td><td>▪ 교통시설
▪ 농어촌구조개선
▪ 지역발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td></tr>
</table>
</td><td>
<table>
<tr><td>사회보험성(6개)</td><td>▪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td></tr>
<tr><td>금융성(8개)</td><td>▪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등</td></tr>
<tr><td>계정성(5개)</td><td>▪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등</td></tr>
<tr><td>사업성(46개)</td><td>▪ 주택도시기금, 남북협력기금 등</td></tr>
</table>
</td></tr>
</table>

제 2 부

2016~2020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제2부 2016~2020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1) 대외여건

2016년

세계경제는 성장과 교역량이 정체된 가운데 브렉시트 등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고용시장 개선 등에 힘입어 소비 중심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달러강세로 인한 수출과 생산 부진이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유로존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브렉시트의 파급영향, 은행권 부실 등이 우려되며, 일본은 엔화강세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기업부채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신흥국은 브라질, 러시아 등 자원수출국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이후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브렉시트 파급영향, 미국 금리인상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선진국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브렉시트의 영향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의 회복 등으로 경기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6.7월) >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세 계	3.1	3.1	3.4	3.6	3.8	3.8
- 선진국	1.9	1.8	1.8	2.0	1.9	1.8
- 신흥국	4.0	4.1	4.6	4.8	5.0	5.1

(2) 대내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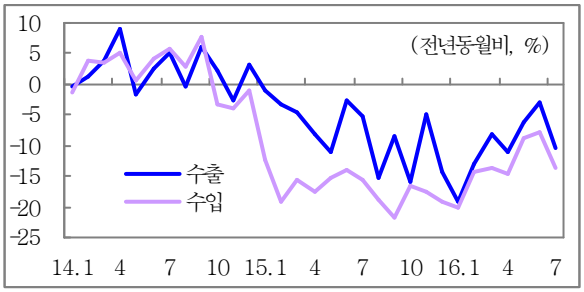
2016년

우리경제는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내수는 주택건설 호조,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부진, 기업 구조조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수출은 유가회복(단가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경제의 저성장 지속, 브렉시트 진행 등으로 회복세는 미약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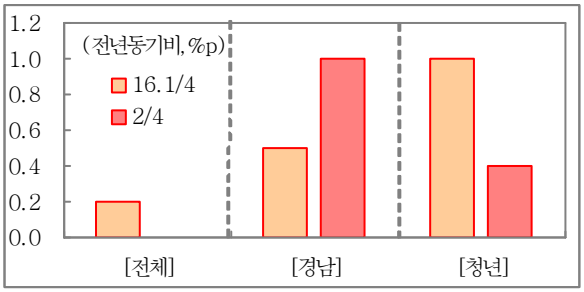
고용은 수출부진,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고용창출력이 약화되어 제조업·청년층, 조선업 밀집지역 중심으로 여건 악화가 예상된다.

수출입 증가율 추이(통관기준)



* 자료 : 무역협회

전년대비 실업률 증감



* 자료 : 통계청

2017년 이후

세계경제 개선,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등으로 2017년 이후 경제성장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 회복세, 세계교역량 개선 등에 따른 수출 회복이 예상되며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와 4대부문 구조개혁·산업개혁 등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 등이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중국의 성장세 둔화, 브렉시트 협상·난민문제 등 유럽지역 불안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재정운용 여건

(1) 재정수입

국세수입

2016년 내수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2017년 이후 경제성장이 점차 개선되면서 국세수입 증가세도 유지될 전망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2015~2019년 계획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경제의 저성장 지속,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2017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 등은 국세수입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세외수입은 세부 항목별 증감요인으로 중기 총량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수입은 가입자 확대 등으로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이 증가하면서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에 따른 사회보장기금 수입증가율 감소('16년 7.0% → '17년 3.7%) 등으로 기금수입 증가세는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는 정부재정 체계 외로 운영되던 자동차 사고피해지원사업 분담금과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각각 자동차 사고피해지원기금과 항공권연대질병퇴치기금으로 편입된다.

(2) 재정지출

복지·의무지출 소요 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2017년에는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비율이 역전됨에 따라 향후 노후소득 및 건강보장에 대한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의무지출 중 법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 증가로 계획기간 중 확대될 전망이다. 이자지출 규모도 국가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의무지출 비중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빠르게 확대되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출 소요도 대폭 증가

의무지출 외에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잠재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지출 소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용여건 악화로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대한 소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문화융성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요구가 증가하고 최근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를 반영하여 대북안보 강화 및 자주국방 실현 등을 위한 국방투자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부처 중기요구 기준 지출증가율은 연평균 6.0% 수준

2016년 1월말 각 부처에서 요구한 2016~2020년 중기사업 계획기간 중 지출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6.0%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 2.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중장기적인 세입 기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출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출 증가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며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2015~2019년 계획 대비 2016~2020년 부처요구 >

(단위 : 조원, %)

구분	'15	'16	'17	'18	'19	'20	증가율
▪ '15～'19년 계획(A)	375.4	386.7	396.7	406.2	416.0	-	2.6
▪ '16～'20년 부처요구(B)		386.4	424.1	447.0	466.3	488.0	6.0
▪ 계획대비 추가요구(B-A)		△0.3	27.4	40.8	50.3		

* 중기 사업계획서 부처요구('16.1월말)

제 3 부

2016~2020년 재정운용방향

제3부 2016~2020년 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 기본방향

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강화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 당면한 도전과제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정운용기간동안 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절감된 재원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 등을 위해 재투자해 나갈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를 재정운용의 중심에 두고, 모든 정책은 일자리 관점에서 재평가하면서, 기존 일자리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이직자,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국민 각 계층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안보·안전·치안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건전재정 운용의 제도적 기틀 마련

이러한 재정운용방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건전재정 운용의 제도적 기틀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보험, 공공기관 등 모든 재정운용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재정건전화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경제 및 재정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채무준칙,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각 사회보험별로 추진되고 있는 전망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사회 보험의 건전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속적인 재정개혁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통폐합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민간투자사업에 새로 도입된 사업방식을 활성화하여 재정투자에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세입 확충을 위해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성과가 낮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특히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해나갈 것이다. 국고보조사업 사전심사 등을 통해 사업 도입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1) 재정수입

재정수입[1]은 연평균 5.0% 증가 전망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2016~2020년 기간 중 연평균 5.0%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16년 국세수입 호조세, 2017년 이후 경제성장 회복세 등에 따른 것으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재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4.0%)보다 높은 수준이다.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안					
▣ 재정수입	391.2	401.0	414.5	436.0	456.3	476.4	5.0
○ 국세수입	222.9	232.7	241.8	252.1	264.5	277.2	5.6
○ 세외수입	27.2	27.2	26.2	28.2	27.1	26.2	△0.9
○ 기금수입	141.1	141.1	146.6	155.8	164.7	173.0	5.2

* 국회 확정예산 기준

1) 재정수입은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을 합친 규모이며, 예산수입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뉜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5.6% 증가

2016년 국세수입 호조세와 2017년 이후 경제성장 회복세 등에 따라 국세수입은 2015~2019년 계획보다 개선된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기 국세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안					
▣ 국세수입	222.9	232.7	241.8	252.1	264.5	277.2	5.6
(증가율)	(-)	(-)	(8.4)	(4.3)	(4.9)	(4.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세외수입은 연평균 0.9% 감소

세외수입은 2016~2020년 기간 중 연평균 0.9% 감소할 전망이다. 혁신도시 이전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 성향 개선 등 일부 증가요인으로 세외수입은 26~28조원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중기 세외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안					
▣ 세외수입	27.2	27.2	26.2	28.2	27.1	26.2	△0.9
(증가율)	(△1.6)	(△1.6)	(△3.7)	(7.8)	(△3.8)	(△3.3)	

* 국회 확정예산 기준

기금수입은 연평균 5.2% 증가

기금수입은 2016~2020년 기간중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3.9% 증가한 146.6조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사회보장성기금과 사업성기금 수입이 각각 4.1%, 3.8%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17년 이후에도 사회보장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매년 5~6% 수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중기 기금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안					
▣ 기금수입	141.1	141.1	146.6	155.8	164.7	173.0	5.2
(증가율)	(5.6)	(5.6)	(3.9)	(6.3)	(5.7)	(5.0)	

* 국회 확정예산 기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16년 수준을 유지 전망

조세부담률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국세수입도 증가하면서 2016~2020년 기간 중 18.8~18.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 >

(단위 : %)

	'16		'17	'18	'19	'20
	본예산*	추경안				
▣ 조세부담률**	18.3	18.9	18.9	18.8	18.8	18.8
▣ 국민부담률	25.1	25.7	26.1	26.2	26.4	26.4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지방세부담률은 '15년 4.5% 수준과 동일 전제

▣ 조세부담률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국민부담률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을 의미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조세부담률에 이를 더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한다.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단위 : %, 2013년 기준)

	한국 (2014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18.0	19.3	17.9	26.7	28.3	25.1
국민부담률	24.6	25.4	30.3	32.9	45.0	34.2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2015)

(2) 재정지출

가. 총 괄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5%

정부는 2016~2020년 기간 중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2015~2019년 계획의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2.6%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다만, 2016~2020년 계획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여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안					
▣ 재정지출	386.4	398.6	400.7	414.3	428.4	443.0	3.5
(증가율)	(2.9)	(6.2)	(3.7)	(3.4)	(3.4)	(3.4)	
① 예산·기금별 구분							
○ 예산지출	263.9	271.3	273.4	281.3	289.2	298.0	3.1
(비중)	(68.3)	(68.1)	(68.2)	(67.9)	(67.5)	(67.3)	
○ 기금지출	122.5	127.3	127.3	133.0	139.2	145.0	4.3
(비중)	(31.7)	(31.9)	(31.8)	(32.1)	(32.5)	(32.7)	
② 지출성격별 구분							
○ 의무지출	182.6	186.7	195.6	204.8	215.1	226.2	5.5
(비중)	(47.3)	(46.8)	(48.8)	(49.4)	(50.2)	(51.1)	
○ 재량지출	203.8	211.9	205.1	209.5	213.3	216.8	1.6
(비중)	(52.7)	(53.2)	(51.2)	(50.6)	(49.8)	(48.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나. 의무지출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5%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는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증가율, 산출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 대상 등이 결정되므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출규모의 통제 가능성, 재정건전성 등 측면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무지출의 범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지출에 한정하였으며, 정부총지출 산정방식에 따라 보전거래(국채·차입금 등 원금상환),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 사업은 제외하였다.

의무지출은 2016~2020년 기간 중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 3.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7.3%에서 2019년에 50%를 초과하여 2020년 51.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

(단위 : 조원, %)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 증가율
▣ 의무지출	182.6	195.6	204.8	215.1	226.2	5.5
▪ 지방이전재원	77.4	85.2	89.5	93.6	97.9	6.1
▪ 복지 분야 법정지출	83.3	87.9	92.1	97.1	102.6	5.3
▪ 이자지출	16.7	16.8	17.5	18.6	20.0	4.7
▪ 기타 의무지출	5.2	5.6	5.6	5.8	5.7	2.3

다. 재량지출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6%

의무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량지출은 2016~2020년 계획기간 동안 증가율을 낮게 유지할(1.6%) 계획이다.

2017년 재량지출은 경제회복 지원 등을 위해 2015~2019년 계획치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2017년 이후에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다.

재량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사전기획, 편성, 집행 및 사후평가 등 사업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지방이전재원[1)]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6년까지는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지원하였다.

* 담배값 개별소비세의 20% 제외(소방안전교부세)

2017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를 기존 방식대로 교부하되, 교육세 전액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교육정책지원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이전재원 중 의무지출은 정부에서 추계한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및 교육세 등 세입 전망치와 의무지출 사업 등을 통해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2017년 의무지출은 세입 증가에 따라 2015년 세수부진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0.7조원)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8조원(10.1%) 증가하고, 이후에도 세입의 증가에 따라 2016년 77.4조원에서 2020년 97.9조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이전재원(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연평균
【 합 계 】	77.4	85.2	89.5	93.6	97.9	6.1
▪ 지방교부세	36.1	40.6	42.7	44.9	47.0	6.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2	40.7*	43.0	45.2	47.4	3.5
▪ 지방교육정책 지원 교부금**	-	3.8	3.8	3.6	3.5	△3.3

*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신설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분은 지방교육정책지원 교부금으로 이관

** 지방교육정책지원 교부금 세출 중 재량지출을 제외한 의무지출 부분

1)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에는 교부금(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정책지원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정책지원교부금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이전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꾸준히 상향 조정해왔다. 지방교부세율은 1995년 13.27%에서 2006년 19.24%(내국세 대비비율)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은 1995년 11.8%에서 2010년 20.27%로 상향조정되었다.

▣ 보건·복지·고용 법정지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무지출로 분류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2016년 9.2조원에서 2020년 10.3조원으로 연평균 2.9%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 소요 추정은 수급자수, 가구당 인원수 등은 개별급여 개편 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물가상승률은 매년 2%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여 추계하였다.

주요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2016년 3.3조원에서 최저보장수준 향상 및 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0년에는 3.9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급여는 2016년 4.7조원에서 2020년 5.2조원으로 2.4% 수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주거급여는 실수급자 실적반영 등으로 2017년 0.94조원으로 감소하나, 이후 기준임대료 상승 등으로 2020년 1.0조원 수준으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전망 >

(단위: 억원,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안					
【 합 계 】	91,912	93,245	94,564	97,256	100,031	102,928	2.9
▪ 생계급여	32,728	33,893	36,191	37,241	38,321	39,432	4.8
▪ 의료급여	47,224	47,392	47,468	48,892	50,358	51,869	2.4
▪ 주거급여	10,289	10,289	9,389	9,671	9,961	10,260	△0.1
▪ 교육·해산·장제급여	1,671	1,671	1,516	1,452	1,391	1,367	△4.9

② 건강보험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 사업은 2016년 7.8조원에서 2020년 7.7조원으로 연평균 0.2%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14% 상당액을 지원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6% 상당액(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상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러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1141호에 따라 2017년까지 한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7년 일반회계 지원규모는 2016년말 2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년의 감액 수준과 유사한 규모로 감액 조정하였다.

2017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규모는 2017년 담배 반출량 추정치인 36.5억갑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

2018년 이후 가입자 지원 사업은 현행 한시규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일단 일반회계 지원규모는 최근 3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0.75%)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건강증진기금 지원규모는 경고그림 등 금연정책 효과를 감안하여 연평균 1% 수준 담배 반출량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추후 한시규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건강보험에 대한 적정지원방식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가부담금보험료

2017년도는 2017년 확정 보험료율(6.12%), 처우개선율(3.5%) 등을 적용하였고, 보험료 인상률 및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2019년까지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건강보험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 합 계 】	77,855	75,807	76,272	76,736	77,218	△0.2
▪ 가입자 지원(일반)	52,060	48,828	49,194	49,563	49,935	△1.0
▪ 가입자 지원(기금)	18,914	19,936	19,734	19,515	19,297	0.5
▪ 공무원·교직원 국가부담금	6,881	7,043	7,344	7,658	7,986	3.8

③ 4대 공적연금

○ 국민연금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는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2016년 18.5조원에서 2020년 24.8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전망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6년 336만명에서 2020년에는 410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2016년 14.2조원에서 2020년 19.0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수급인원 증가(2016년 42.7만명 → 2020년 55.1만명, 연평균 6.6%)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과 퇴직자 증가(연평균 4.3%)로 인한 퇴직수당 증가분이 반영되었다.

○ 사학연금

사학연금 의무지출은 2016년 2.7조원에서 2020년 3.7조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할 전망이다. 연금수급자수는 2016년 9.5만명에서 2020년 12.1만명으로 연평균 6.4% 증가하는데 이는 연금선택율 및 퇴직자 수 증가, 수급기간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3년 평균수급자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이다.

○ 군인연금

군인연금기금 의무지출은 2016년 3.0조원에서 2020년 3.7조원으로 연평균 5.3%증가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연금수급기간 장기화 및 수급인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5년간 평균 순증 인원을 연금지급금 예상에 반영하였다.

<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 합 계 】	384,486	414,794	443,596	476,972	511,840	7.4
▪ 국민연금	185,488	199,043	214,170	230,447	247,961	7.5
▪ 공무원연금	142,156	155,111	164,326	177,161	189,972	7.5
▪ 사학연금	26,980	29,925	31,947	34,458	37,173	8.3
▪ 군인연금	29,861	30,716	33,153	34,906	36,734	5.3

④ 노인부문

○ 기초연금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액(2016년 최대 20.4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16년 약 7.9조원에서 2020년 약 9.6조원(국비 기준)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16년 6,343억원에서 2020년 6,840억원으로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치매특별등급(등급외 치매질환자 대상 장기요양보험 혜택)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2016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등급 완화는 없으나 요양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고려하여 매년 평균 2%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하였다.

< 노인부문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안					
【 합 계 】	85,035	85,035	87,650	91,767	97,169	103,323	5.0
▪ 기초연금	78,692	78,692	80,961	85,028	90,380	96,483	5.2
▪ 노인장기요양보험	6,343	6,343	6,689	6,739	6,789	6,840	1.9

⑤ 보훈부문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2016년 2조 5,130억원에서 2020년 2조 8,416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급과 2급 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2017년 3.5% 인상 이후 매년 3.0% 처우개선과 인원감소분을 반영하여 2016년 590억원에서 2020년 581억원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16년 5,926억원에서 2020년 5,474억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7년 단가 2만원 인상 이후 2020년까지 지급단가를 동결하고 지급인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감소 효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외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는 최근 진료비 증감률 등을 적용한 결과, 2016년 5,386억원에서 2020년 6,359억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보훈부문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안					
【 합 계 】	40,405	40,405	41,776	42,679	43,456	44,343	2.4
▪ 보상금	25,130	25,130	26,047	26,763	27,550	28,416	3.1
▪ 간호수당	590	590	581	578	579	581	△0.4
▪ 참전명예수당	5,926	5,926	6,147	5,950	5,706	5,474	△2.0
▪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	5,386	5,386	5,544	5,900	6,124	6,359	4.2
▪ 기타	3,372	3,372	3,458	3,488	3,497	3,513	1.0

* 보상금: '17년 3.5% 인상, '18년부터 3% 인상, 지급인원 :'16년190천명→'20년 194천명(+4천명)
* 간호수당: '17년 3.5% 인상, '18년부터 3% 인상, 지급인원 : '16년 3,315명→'20년 2,898명(△417명)
* 참전수당: '17년 2만원 인상, '18년부터 단가동결, 지급인원 : '16년 247천명→'20년 207천명(△40천명)

▣ 이자지출

○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는 최근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6년 11.5조원에서 2017년 12.5조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0년 15.1조원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주택도시기금 국공채이자

주택도시기금 국공채이자는 2016~2017년 1.6조원 수준이나, 2018년 1.3조원까지 감소한 이후 2020년에는 1.5조원 수준으로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국공채이자는 주택 인·허가, 등기·등록시 발행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에 따른 이자가 대부분인데, 2018년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이자율 인하(2012.8월 3.0→2.5%, 2013.5월 2.5→2.25%),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원금 감소 등으로 이자상환액이 감소할 전망이다. 2019년 이후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원금 증가 등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

우체국예금 지급이자는 저금리 기조와 금융시장 경쟁심화로 예금 수신고 소폭 증가(2015년 61.1조원 → 2020년 61.5조원), 지급이자 조정(2017년 3.5→2.64%)등의 영향으로 2018~2020년까지 매년 0.2%p씩은 증가(2.64%~3.24% 변동 등을 전제 시)하나, 2016년 기준 2.2조원에서 2020년 2조원으로 연평균 △2.6% 감소할 전망이다.

< 이자지출 전망 >

(단위: 억원,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					
【 합 계 】	166,646	166,646	168,381	175,057	186,248	200,183	4.7
▪ 공공자금관리기금	115,240	115,240	125,182	132,892	141,097	150,542	6.9
▪ 주택도시기금	16,551	16,551	15,941	12,518	13,300	15,350	△1.9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2,170	22,170	16,286	17,516	18,746	19,976	△2.6
▪ 기 타	12,685	12,685	10,972	12,131	13,108	14,314	3.1

▣ 기타 의무지출

①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1)]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쌀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논 1ha당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과 달리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2)]하기 위해 정부재정에서 직접 개별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WTO에서 허용하는 정책(허용보조)이다.

지원단가는 1ha당 100만원까지 상향할 계획을 당초 2017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겨 달성하여 매년 100만원/ha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 농지는 농지전용 등으로 지원대상(1998~2000년간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 농지가 지속 감소(2009년 : 893천ha → 2015 : 844천ha)하는 점을 고려, 2016년(824천ha)부터 매년 1.0%씩 감소함을 가정하였다.

②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예산분담금

국제기구분담금 중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예산분담금은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2016년 1,995억원에서 2017년 1,946억원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따른 UN 분담율 증가 전망 등에 따라 2016~2020년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타 의무지출 전망 >

(단위 : 억원,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					
【 합 계 】	52,280	53,075	56,264	56,461	58,224	57,191	2.3
▪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8,240	8,240	8,160	8,078	7,998	7,918	△1.0
▪ 유엔PKO예산분담금	1,995	1,995	1,946	1,986	2,010	2,056	0.8
▪ 기 타	42,045	42,840	46,158	46,397	48,216	47,217	2.9

1)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쌀소득고정직불금 등 9개의 직불금이 시행 중에 있음

2) 홍수조절,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는 단계적으로 회복되도록 관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등으로 사회보장성기금[1] 수지를 제외한 2017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1.7% 수준이 전망된다. 2016~2020년 기간 중 세입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도 단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0년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1.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16~2020년 기간 중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가 개선되면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GDP 대비 0.1%에서 2020년 GDP 대비 1.7%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기 재정수지 전망 >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 관리재정수지	△39.1	△28.1	△25.0	△23.2	△20.4
(GDP대비, %)	(△2.4)	(△1.7)	(△1.4)	(△1.2)	(△1.0)
※ 통합재정수지	2.4	13.8	21.7	27.9	33.4
(GDP대비, %)	(0.1)	(0.8)	(1.2)	(1.5)	(1.7)

* '16년은 추경안 기준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

2016~2020년 계획기간 중 국가채무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등으로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40%를 초과하여 40.4% 수준으로 예상되나, 국세수입 등 세입여건 개선 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감소하여 2020년에는 GDP 대비 40.7%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대 수준은 여전히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으로, IMF 등 국제기구와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외부 충격에 따른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구조적 변화에 따른 중장기 미래 재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중기 국가채무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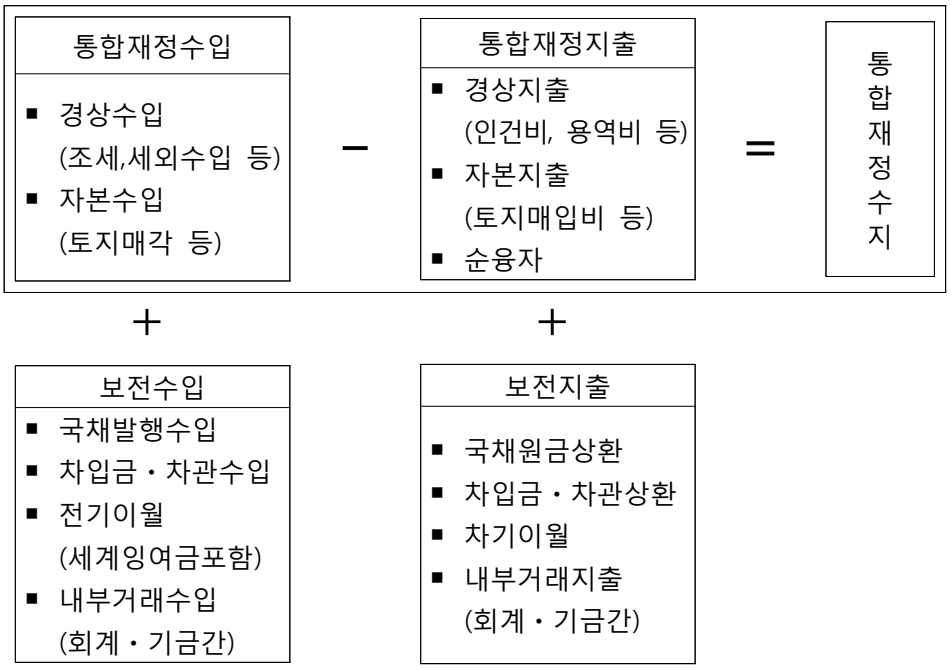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 국가채무	637.8	682.7	722.5	756.8	793.5
(GDP대비, %)	(39.3)	(40.4)	(40.9)	(40.7)	(40.7)
○ 적자성 채무	368.0	397.5	423.3	448.5	471.8
○ 금융성 채무	269.8	285.2	299.2	308.4	321.7

* '16년은 추경안 기준

▣ 통합재정수지

○ 당해 회계연도의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통합재정수입 및 통합재정지출은 예산, 기금 등 정부재정수입·지출 규모에서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차입 및 채무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흑자는 장래의 연금·보험 등의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수지 산정시 제외한다.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 사회보장성 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 기본방향

맞춤형 복지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의료·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농어민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수혜자의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함께 일자리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게임산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고용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융성·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한 '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지원 등 문화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미래대비 국가 전략기술 확보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안보·치안서비스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핵심전력 투자를 늘리고,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2)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6~'20 연평균
총 지 출	386.4 (2.9)	400.7 (3.7)	414.3 (3.4)	428.4 (3.4)	443.0 (3.4)	3.5
1. 보건・복지・고용	123.4	130.0	135.8	141.6	147.7	4.6
2. 교육	53.2	56.4	58.8	61.0	63.4	4.5
3. 문화・체육・관광	6.6	7.1	8.1	8.4	8.6	6.8
4. 환경	6.9	6.9	6.8	6.7	6.7	△0.6
5. R&D	19.1	19.4	19.7	19.9	20.2	1.5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5.9	15.7	15.4	15.2	△1.7
7. SOC	23.7	21.8	20.3	19.3	18.5	△6.0
8. 농림・수산・식품	19.4	19.5	19.4	19.3	19.3	△0.2
9. 국방	38.8	40.3	41.8	43.2	44.7	3.6
10. 외교・통일	4.7	4.6	4.7	4.9	5.0	1.7
11. 공공질서・안전	17.5	18.0	18.7	19.4	20.1	3.5
12. 일반・지방행정	59.5	63.9	66.9	69.6	73.5	5.4

▣ 보건·복지·고용 분야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 5년간 연평균 3.1% 수준으로 전망된다(2016년 37.7 → 2020년 42.6조원). 그간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정부 총지출을 상회하여 증가해왔으며 청년취업 및 서민주거 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및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장방문 차량도 지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교육 분야

교육분야 재량지출은 2016~2020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16년 12.0 → 2020년 12.6조원) 동 기간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평균 3.5% 증가되어 지역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2016년 41.2 → 2020년 47.4조원)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설치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면서 교육 최종수요자인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량지출은 2016~2020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16년 6.6 → 2020년 8.6조원) 이 기간은 2018년 문화재정 2%를 달성하는 등 문화융성을 꽃피우는 시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경제의 신성장동력이자 청년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서 콘텐츠・관광산업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게임, 가상현실 등 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며 전통문화와 한류를 연계한 관광상품・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문화재는 보수・정비 위주에서 활용위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여 궁궐축전, 창덕궁 달빛기행 등 다양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전국민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체육・문화축제로서 개최・운영하고 프로-아마 통합리그 시스템 도입 등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을 통해 체육계 저변을 확산해나갈 것이다. 문화소외계층의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문화융성을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R&D 분야

R&D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 5년간 연평균 1.5% 수준으로 전망되어(2016년 19.1 → 2020년 20.1조원) 2015~2019년 계획(연평균 1.7%)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그간 R&D 분야별 정부 총지출을 상회하여 증가해왔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 및 성과에 기반한 R&D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현재 R&D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비중(GDP 대비)을 유지

해왔고, 이제 외연확대보다는 내실화를 기할 시점이라는 지적 등을 반영하였다. 다만, R&D 분야는 미래를 대비한 투자임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및 기업 R&D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R&D 혁신을 위해 장기계속사업은 지속적으로 일몰을 유도하고 R&D 바우처 확대 등 제도개선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2016~2020년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16년 15.3 → 2020년 14.2조원) 이는 주로 에너지 분야에서 융자사업의 단계적 감축,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등으로 인한 감소분 때문이다. 아울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금융연계를 통한 보조금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재원절감을 위한 민간 역할 강화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수출 촉진·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SOC 분야

SOC 분야 재량지출은 2016～2020년 중기계획 기간 중 연평균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16년 23.7 → 2020년 18.5조원) 이는 그동안 축적된 SOC 스톡수준을 감안하여 투자규모의 양적 확대보다는 투자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재정투자

보완과 함께, 新기술 접목으로 SOC 건설·운영비 절감을 병행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SOC 투자규모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도건설 계획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출소요 및 재원대책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존 사업도 여건변동에 따른 재평가를 통해 사업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2016~2020년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16년 17.2 → 2020년 17.0조원) 이는 농업체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미흡 사업의 구조조정, 농업 SOC, 민간부담 수행 성격사업 등의 감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지만,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산물 수출 확대,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융복합, 농업 6차산업화 확대 등 중점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연차별 소요를 적정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강화 등에 중점을 두면서, 농어업 구조조정 및 평가강화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농어업 발전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 환경 분야

환경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수질개선을 위한 인프라가 상당부분 구축되었으나 2017년 부처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중기계획기간 중 연평균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16년 6.9 → 2020년 6.7조원). 환경기초시설은 상대적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낮거나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누수율이 높은 群지역 중심으로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한중 미세먼지 실증협력사업을 통해 대외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에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보존·복원 강화, 폐기물 에너지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신설(2017년) 하는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방 분야

국방 분야 재량지출은 2016~2020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16년 36.7 → 2020년 41.1조원) 이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전력인 Kill chain/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및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보라매 사업) 등 국가적 대형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기 때문이다.

또한 방위력개선분야의 투자 확대에 따른 군수지원 증가, 예비군 훈련장 현대화 및 시설 개선 등에 따라 재량지출 규모가 증가하였다. 국방분야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병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 국방 개혁에 따른 간부 증원 등으로 병력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군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체계 수립, 국방비에 대한 소요검증 강화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강화하여 국방비 지출 효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외교·통일 분야

외교·통일 분야 재량지출은 2016~2020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2016년 2.8 → 2020년 3.1조원) 된다. 이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출범을 맞아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를 지속 확대하고, 미·중·일 등 핵심 국가와의 전략적 외교역량 강화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외교·통일 분야의 지원확대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한반도의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집행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공공질서·안전 분야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량지출은 2016~2020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16년 17.5 → 2020년 20.1조원) 이는 특정범죄 전자감독 강화, 난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 지원확대, 범죄 피해자 보호확대, 빠르고 편리한 전자소송서비스 확대, 치안업무 과학화를 통한 현장대응능력 제고, 재해·재난 예방사업 투자 확충에 중점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한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 도모에 기여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제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다. 그리고 화상공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위한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홍보 강화 등 취약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를 활성화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일반·지방행정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16년 11.2 → 2020년 10.7조원) 이는 교부세 감소에 따른 한시적 지원인 지방채 인수 규모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향후 빅데이터, 클라우드 투자 등 정부3.0 프로젝트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등의 공정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용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제 4 부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제4부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1. 보건·복지·고용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선진국 수준의 복지 제도 구축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건강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 국민기초생활보장(2000), 기초노령연금(2008) 제도 도입 등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4대 중증, 3대 비급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013~), 기초연금 도입(2014) 및 장애인연금 확대(20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2015)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를 완비하였다. 또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출산율 제고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국민의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대폭 확대하여 왔다. 복지 분야 투자규모는 최근 5년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여 연평균 7.6%로 상승하였다.

<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1	'12	'13	'14	'15	연평균 증가율
* 보건·복지·노동 분야(조원)	86.4	92.6	97.4	106.4	115.7	7.6%

* 본예산 기준(추경 포함시 '13년 99.3조원, '15년 120.4조원)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확충

지난 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만 0~5세 영유아 계층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2013)하였고, 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했으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높이고 아빠의

달을 시행(2014)하면서 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2008)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2007), 농지연금(2011)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을 도입하면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도입(2008) 및 대상자 확대, 노인 틀니(2012) 및 임플란트 급여화(2014)를 통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2014년 12월 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 제·개정을 통해 맞춤형 급여체계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소득수준별로 단계적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2015.7월)하였다. 그 결과 소득상승에 따라 혜택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를 개선하였다.

생계급여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에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되면서 보장수준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가구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총 수급자는 약 33만명 증가한 165만명(2015년말)에 이르렀다.

의료급여는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4대중증질환, 틀니, 임플란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차상위 의료비 본인부담분 경감 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의료보장 수준은 한층 강화되었다.

주거급여는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임대료를 산정함으로써 최저주거수준을 보장하도록 했고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확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우리경제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임신·출산·육아 등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로 맞춤형 복지 강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맞춤반을 정착시키고 맞춤반 이용 부모에게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확충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품질 제고를 도모할 것이다.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동의 출발선상의 평등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고아원 등 아동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이나 수급자 가구의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하기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 연령도 확대하였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기준연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확충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강화할 것이다. 독거노인 안전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기본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가스감지 등 장비 설치를 확대할 것이다.

장애인에게는 장애연금 등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할 것이다. 2014년 확대 개편된 장애인연금을 중증장애인의 70%가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며, 지원 수준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인상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혼자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한다.

새일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온라인 교육 및 취업상담서비스를 확대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복지 체감도 제고

복지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복지지원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가장의 사망, 일시적인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긴급복지를 지속 지원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 선정 기준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차상위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실시하던 사례관리를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읍면동 차원의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고 현장방문 차량과 사례관리비를 지원하여 지원대상자와의 접근성·접촉빈도를 높이고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욕구 및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나갈 것이다.

일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일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체계로 전환하여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근로활동을 유도할 것이다. 자활근로 중 취·창업 가능성이 높은 시장진입형을 늘리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이 가입하는 희망키움통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기조

2016년 2월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는 세대와 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DI를 통해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평가를 추진했고, 각 부처별로 재정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스스로 진단해 보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또한, 각 부처에 산재된 일자리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고용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재정에서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 효율화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사업 효율화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과거 경기상황이 안 좋았을 때 한시적으로 크게 늘렸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은 저성과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등은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직업훈련과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통폐합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검색하고, 직접 온라인 상에서 참여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일자리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해외환자 유치 및 국내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확대를 통해 한국의료의 해외 인지도·신뢰도를 제고하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함으로써 국내 보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전문 병원 구축 등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정신질환 등 사회적 병리현상 해결을 위해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병원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고용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보건·복지·고용	123,400	130,001	135,786	141,602	147,682	4.6
○ 사회복지분야	112,866	119,693	125,399	131,201	137,197	5.0
▪ 기초생활보장	10,131	10,343	10,478	10,561	10,780	1.6
▪ 취약계층지원	2,499	2,540	2,618	2,667	2,880	3.6
▪ 공적연금	42,706	45,400	49,312	52,948	55,793	6.9
▪ 보육·가족·여성	5,765	5,852	5,325	5,393	5,559	△0.9
▪ 노인·청소년	9,421	9,733	10,103	10,243	10,793	3.5
▪ 노 동	17,295	18,835	19,271	19,923	20,956	4.9
▪ 보 훈	4,818	4,981	5,009	5,029	5,068	1.3
▪ 주 택	19,438	21,180	22,436	23,571	24,483	5.9
▪ 사회복지일반	792	828	847	866	884	2.8
○ 보건분야	10,534	10,308	10,387	10,401	10,485	△0.1
▪ 보건의료	2,328	2,296	2,318	2,276	2,301	△0.3
▪ 건강보험	7,786	7,581	7,628	7,674	7,722	△0.2
▪ 식품의약안전	420	431	441	451	462	2.4

(3) 중점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맞춤형 급여체계 정착

통합급여 체계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기준 충족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어(all or nothing) 일부 지원만 필요한 위기 가구 등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감소하게 되므로 근로를 통한 탈수급 유인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대상선정 기준, 보장수준 등을 차별화하는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했으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다만 주거·교육급여는 계획 대비 지원인원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취·창업 및 탈수급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신규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일키움통장을 도입했다. 현재는 자활근로 참여자가 저축시 자활근로사업단 수익의 일부를 매칭하고 있으나, 자산형성에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인 저축액과 동일 금액을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

보육체계 개편을 통한 보육품질 제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13년부터 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0~5세 아동은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지급받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5세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급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종일제 보육 제공에 따라 대부분의 아동들이 오후

4시에 하원하여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필요한 만큼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가정양육을 통해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필요한 시기에 보육시설을 과도하게 이용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맞벌이·다자녀·장애아·저소득층 등 종일 보육이 필요한 가구에는 하루 12시간(07:30~19:30) 종일반으로 편성하고, 그 외 가구에 대해서는 하루 6시간(09:00~15:00) 맞춤반으로 편성하는 등 실수요를 고려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맞춤반 아동의 시간외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보육바우처를 월 15시간 지급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전액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품질 개선 등에 재투자한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이 본래의 취지대로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간차등형 보육 내실화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수요가 많은 양질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직장 근처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여성의 보육수요도 충족시켜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연계하여 장애인 권익 보호 관련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2017년부터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한다.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는 한편 장애인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의학적 기준에 따라 구분된 장애등급에 기초하여 장애인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장애 판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인별 환경요인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노후 불안 해소 및 저소득 노인 소득보전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가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노인의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노인인구 증가 및 핵가족화로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우울증도 증가하고 있어 소외받는 독거노인이 점차 줄어들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안전확인을 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사회관계가 위축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친구를 만들어 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기업과 청년의 눈높이를 맞춰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취업준비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재학단계에서부터 장·단기 직무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직업훈련 대상에 대학 최종학년을 포함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인문계 학생을 대상으로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인문 특화과정으로 개편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취업준비 과정에서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 병행, 해외취업지원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창업성공패키지 등 청년

창업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구인-구직자간 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확충해 고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업 이후에도 청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2년 근속시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참여대상을 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수료자, 일학습병행 참여자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등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육아 부담이나 사내 눈치를 보지 않고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먼저 출산 이후에만 가능한 육아휴직을 임신시부터 가능(임신기 육아휴직)토록 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을 현행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마음 놓고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출산이후에는 복직이 용이하도록 육아휴직후 복직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재고용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의 유연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을 확대하고, 유연·재택근무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간접노무비(20→40만원) 지원을 인상하고, 원격근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비 등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일학습 병행 및 미래 유망분야 선도인력 양성

청년실업 완화, 기업의 재교육비용 감소 등을 위해 현장중심 훈련의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한 일학습병행제를

2013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1만개 기업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공업계열뿐만 아니라 IT,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까지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병행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 200여개 특성화고가 참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양적 확산과 더불어 질적 내실화를 위해 일학습병행제 근거 법률 제정, 기업현장교사 역량강화 교육 확대(1→2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파생되는 미래 유망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인 폴리텍에 ICT 융복합, 에너지, 신소재 등 3개의 Test-Bed 훈련과정을 신규로 개설하고, 일학습병행제 참여 특성화고 졸업생 대상 고급훈련과정도 3개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역량을 갖춘 민간훈련기관을 통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하이테크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취업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등에 대해서는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노인들은 정년연장과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오래 재직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퇴직이후에도 노동시장 재참여가 가능하도록 노인일자리 및 장년인턴제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대상을 현행 기간제, 파견, 안전보건관리자에서 사내하도급,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임금상승분의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취업촉진을 위해 2017년부터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분리하여 새롭게 운영한다. 장애인들의 취업 어려움을 감안하여 훈련기간은 최대 8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훈련수당 지급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확충 및 사회안전망 구축

구인, 구직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On/Off Line 고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고용복지+센터를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고, 취업지원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고용복지+센터의 취업알선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센터장 공모제, 민간 위탁기관 In-Sourcing 등을 통해 민간부문과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고용서비스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별로 산재된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등 일자리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On-line상의 고용서비스 시스템을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로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임금근로자 근로유인 제고 및 실직시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 개편을 병행할 것이다. 기존에 실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지급하던 것을 60%로 확대 개편하고, 90~240일이던 지급기간도 30일씩 연장한다. 이와 더불어, 일일 상한액을 기존 4.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착에서 사회통합까지'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조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입국전, 입국후 초기적응기, 가족형성, 통합기 등 다문화가족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초기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간 멘토링, 가족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학령기 자녀 급증 추세를 반영한 자녀 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상담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1577-1366) 및 온라인 정보제공 창구인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의 다문화 인식제고를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및 정책 홍보를 병행하고,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요보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들의 공평한 출발선 보장 강화와 사회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계층 아동이 만 12세~18세까지 저축을 하여(정부가 3만원 이내 매칭)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기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기간을 현재 만12세에서 만12~13세로 연장하여 가입시기를 놓친 아동의 가입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정부지원 운영비도 인상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및 방과후 아카데미 등 유사한 돌봄프로그램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취학시기 아동을 둔 부모에게 관련제도를 상시 안내하고 부모가 적정한 시설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혜인원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던「취업사관학교 지원」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개발 및 자립을 지원하는 등 빈틈없는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해 발굴된 위기청소년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지원,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등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포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및 취약가족 지원 강화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통합 및 효율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직장내 고충해소, 육아참여 활성화 지원 등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지역여건 및 정책 수요자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 또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찾아가는 가족상담, 부모교육, 자원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통한 건강한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여성 보호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폭력 범죄자 신상관리를 강화하고, 성폭력 신속대응팀을 확대 배치하여 성폭력 범죄를 사전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취약여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부모, 맞벌이 등 취약가족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간병비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부모의 사정으로 센터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피해 아동에게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치료동행서비스도

중단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캠페인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적 예방정책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수선 지원을 계속 지원하고, 특히 지원 기준이 되는 평균 임대료를 인상하여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전체 주택 대비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약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중산층 주거안정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부지, 유수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2017년에는 4.8만호 공급(승인기준)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어르신 등 주거취약 계층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취약지·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 주민들을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산부인과 등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선택진료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병상을

지속 확대하여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한편, 난임 시술비, 간질환 초음파 검사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시장조사, 비즈모델 개발,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간 협력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에 누적 120만명을 돌파하면서 증가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해외환자들의 유치기반을 지속 확충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를 신규 실시하고 외국인환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종합상담창구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국의료인연수를 위한 'K-Medical 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외국의료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해외환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업체의 해외 진출지원을 위해 해외 전문가 활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017년부터는 국내 제약업체가 해외 현지에서 국내의약품 수입·판매 유통 기관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 중남미, 중동 지역 등에 대한 사업 진출 모델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 유망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ODM(제조업자개발생산)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파트너 발굴 사업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부터는 국내기업의 조속한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허가(식약처)·신의료기술 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험 등재(심사평가원) 등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원스톱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안전 관리 강화

어린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를 지원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비의무화 품목중 다소비 품목을 선별하여,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의 위해요소관리 기준들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도 시행한다.

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 강화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구제제도도 지속 운영한다.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기 추적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작용 의료기기 모니터링 센터 확대를 통해 의료기기의 부작용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민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만 6세 미만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을 추가하여 2017년부터 무료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핵발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7년에 의료기관·요양시설 종사자, 군입대 예정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2016년 8월 발표된 항생제 내성균 관리대책에 따라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 및 방지를 위해 항생제 처방지침 및 처방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병원 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범부처 항생제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긴급상황센터를 설치하여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의 전문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경고그림 도입, 학교 금연사업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실시, 학교밖청소년 및 직장여성 대상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흡연자 금연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2017년에는 장기흡연자들의 건강 상황을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살, 중독 등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응하여 정신질환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중증외상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 재난 발생시 국가재난의료체계가 신속 가동될 수 있도록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전국 거점병원에 재난의료출동차량과 전담인력 배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급차로 환자이송이 어려운 이송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탑승하고 및 응급의료장비를 탑재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을 확대 하는 등 신속한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상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추진할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수급자 선정방식을 종전의 신청제에서 수급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안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그 수혜대상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급증하는 국립묘지 안장 수요에 대비하여 국립묘지 시설확충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6		'20
▪ 합계출산율(명)	1.2	⇨	1.5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자활성공률(%)	34.0	⇨	38.0
▪ 행정복지센터(개소)	700	⇨	3,502
▪ 기초연급수급자(만명)	480.4	⇨	565.9
▪ 해외환자 유치 수(만명)	32	⇨	80

정책해설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아동 사전발굴 시스템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사건이 대부분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2015년 기준 79.8%)함에 따라 피해사례 조기발굴이 어려워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사전예방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검진·예방접종 기록, 의무교육 미취학·장기결석 등 공공데이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하여 위기아동 선별을 위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모델을 통해 분석하여 고위험가구를 사전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발굴된 고위험가구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읍면동 복지허브, 드림스타트 등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피해아동 사망 등으로 사회적 문제화되기 이전에는 발굴하기 어려웠던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사전 예방·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해설 기업연계형 노인일자리 신설

기업연계형 일자리는 기업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기업에 관련 설비·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노인을 고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일자리 모델이다.

예를 들어, 빨래방에 무인함 설치를 지원하면, 빨래방은 노인을 고용하여 무인함에 맡겨진 세탁물의 세탁·건조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하는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는 2017년 3,000개의 기업연계형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60억원)이며, 민간 기업의 참여로 지속가능하고 노인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배경

○ 그간 청년취업인턴제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면서 소규모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 다만, 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청년 체감도가 낮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 장기근속의 유인이 적다는 지적 존재

○ 이에 인턴제 근로자 지원을 현금지급 방식에서 자산형성 방식으로 전환하여 청년 정책 체감도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

▣ 주요사업내용

○ 중기청 「내일채움공제」 사업(2014년 8월) 틀을 차용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 가상계좌에 기업 납입금 및 정부의 근로자 지원금 적립 → 2년 만근시 적립금(1,200만원+이자) 수령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특징) 청년 직접 지원 강화 및 자산형성 방식 지원

○ (기대효과)

- (근로자)
  · 실질적 경력형성(최소 2년 동일사업장 근속 유지)
  · 미래설계 기반 마련(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 일시금 수령)
  · 장기근속 지속 유지 가능(2년 후 중기청에서 시행중인 내일채움공제(5년, 2천만원)로 재가입 가능)

- (기 업)
  · 우수인력 고용유지
  ·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 도모
  · 인건비 절감 목적 기업 필터링

▣ 추진배경

○ 독일·스위스式 도제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한 일학습병행제 확산 ⇒ 청년의 早期 취업과 일터 기반의 학습을 통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

▣ 주요 사업 내용

주로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국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

○ (신청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술기업

○ (지원사항)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학습도구 개발 지원,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육성 지원, 훈련비 및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지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기업 주도) 교육훈련내용, 운영방법 등을 기업이 결정하고, 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만 외부기관(교육훈련기관)에 위탁

○ (교육훈련프로그램) 교육훈련과목, 시간, 기업현장교사, 평가 등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 (현장에서 교육훈련) 실제로 생산(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훈련

○ (산업계 통용 자격 취득) 일학습병행제에 의해 습득한 직무능력에 대해서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

정책해설 | 전환형 시간선택제

▣ 추진배경

○ 근로자가 필요한 때(육아, 학업, 건강, 퇴직준비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

▣ 주요 사업 내용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

* ① 전환장려금(전환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 월 최고 20만원
② 간접노무비(인사노무관리비 일부 지원) : 월 20만원(중소기업만 지원)
③ 대체인력지원금(대체인력 인건비) : 월 최고 60만원(대기업 30만원)

▣ '17년 제도개선 및 기대효과

○ ('17년 제도개선) 신규채용 시간선택제를 보완하면서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확대·강화

- 지원인원 확대(2,040→4,000명), 전환장려금 인상(월 최고20→40만원)

* 예산규모 : ('16년 예산) 463억원 → ('17년 예산안) 545억원

○ (기대효과)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선택할 수 있는 고용문화를 조성하여 경력단절 예방, 고용률 제고 및 저출산 극복

- 근로자 : 근로자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켜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기업 : 숙련인력 이직방지, 인사관리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국가 :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으로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해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현재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폴리오(소아마비), 풍진, 일본뇌염, 수두, 뇌수막염, 소아폐렴, A형간염, 자궁경부암 백신(HPV) 등 총 15종의 감염병이 대상이다.

정부는 겨울철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가하여 지원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 5세 이하 어린이는 가까운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교육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창의성·인성 중심의 공교육 체제 확립 지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2년 38.4조원에서 2016년 41.2조원으로 연평균 1.8%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정 확충을 통해 자유학기제 확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2015.9.23.) 발표 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왔다.

학교폭력 사전대응, 학생 안전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는 한편, 다문화·탈북·학업중단 학생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기회를 제공하였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고등교육 지원

누구나 경제적 부담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에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고, 든든학자금 지원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2010년 1학년 → 2011년 1~2학년 → 2012년 1~3학년 → 2013년 1~4학년)하는 등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였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완료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여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대학·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대학이 자신의 건학이념과 특성, 지역 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 특성화를 달성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사업,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사업, 대학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BK21(Brain Korea 21) 플러스 사업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충해 왔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서울대학교(2012년)와 인천대학교(2013년)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교육

고졸 취업자의 대학진학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과 전문대학 연계를 통한 청년고용 창출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비문해 학습자, 농어촌 주민 등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충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산업현장의 직무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특성화고·전문대학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등 능력중심 사회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하였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조원) : ('12) 38.4 → ('16) 41.2
* 자유학기제 학교 수(교) : ('13) 42 → ('14) 811 → ('15) 2,551 → ('16) 3,213
* PISA 2012 한국 순위(OECD 34개국) : 읽기 1~2위, 수학 1위, 과학 2~4위
* Times 세계대학평가 400위 권 국내 대학 수(교) : ('12) 6 → ('15) 8
* 특성화고 취업률(%) : ('13) 37.5 → ('16) 46.6
* IMD 교육경쟁력 순위(위) : ('11) 29 → ('13) 25
* 평생학습 참여율(%) : ('11) 32.4 → ('15) 40.6

< 교육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교육 분야(조원)	43.7	49.9	50.4	52.9	53.2	5.0%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육 정상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구현하고,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시행하여 체험·실천적인 인성교육 강화 및 학생의 인성역량 함양을 추진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로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 SW 교육·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여 범죄없는 학교 실현을 추진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다문화 학생의 교육기회 평등 실현, 탈북학생 조기적응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혁신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9년 이후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간 유사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나갈 것이다.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연구, 산학협력, 특성화, 교육역량 강화 지원 등 4부문으로 재편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2주기 구조개혁평가와 연계하여 대학에 투입되는 재원의 효과적 집행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정원 감축 등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주기 평가 결과 분석, 대학 현장 의견수렴, 구조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2주기

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2주기 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개혁 및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국립대 혁신을 견인하고, 국립대 혁신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및 구체적 액션플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서 국립대학간 기능조정, 캠퍼스 특성화 등 국립대 혁신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다.

일학습병행 및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을 통해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현장수요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한, 다양한 능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학습-자격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평생 직업교육 기능 강화 및 대학별 특성화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현장 선호도가 높은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선취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대학내 다양한 후진학 제도를 확대하여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교육기회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경력단절 최소화, 학사제도 유연화, 학비부담 완화 등 후진학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체제 개선을 추진하고, 온라인 평생학습, 방송중·고 설치 지속 확대, 문해교육 방송 제작·방영 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확대로 맞춤형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누구나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경제적 부담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반값등록금 완성 이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대학생 직접 체험기회 확대 및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과정 내실화 등을 위한 교외근로장학금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생들의 안정적 입직·창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다자녀 장학금 등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군복무 대학생에 대한 대출이자 면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선,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이행 장치를 마련하여 최종교육수요자인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출구조를 확립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지속 지원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이다.

< 교육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교육 분야**	53,186	56,436	58,796	60,952	63,396	4.5
○ 유아 및 초·중등교육	43,059	46,186	48,585	51,008	53,492	5.6
○ 고등교육	9,359	9,444	9,442	9,500	9,455	0.3
○ 평생·직업교육	658	697	656	326	325	△16.1
○ 교육 일반	110	110	113	118	124	3.0

* '16년은 국회확정 예산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창의성·인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2016년부터 중학교(3,213교) 전체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 체험 지원 확대, 지역 체험자원 확보 등 우수 체험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내실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원한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 SW 교육 필수화 기반 마련, 즐겁게 배우는 수학 교육, 실생활 중심 영어교육 내실화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을 인성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학교교육 내실화·정상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대학구조개혁 및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체제 개편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을 마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문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인력양성체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 입직과 도전적 창업을 지원한다. 기존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의 성과 위에서 산학협력을 심화시켜 나감과 동시에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 양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안정적 입직을 위해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과정 등 사회맞춤형 학과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활력을 기반으로 한 대학생의 도전적 창업 지원을 위해 대학생 창업 기업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맞춤형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모태펀드 내 별도계정을 설치하고, 대학, 동문 등이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에 매칭 출자하는 방식으로 대학 내 창업 인재들의 초기 자본금 조달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수준의 소액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 인재들의 창업 도전과 실전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의 Death Valley 극복을 통한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여 대학의 만족도가 높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을 고도화하고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학문 후속세대의 안정적 양성을 위해 BK21 플러스 사업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특성화사업(CK), PRIME, CORE,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등은 향후 집중적인 특성화 지원에 대비한 효과적인 통합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 구축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을 전면 적용하여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무 중심 교육을 추진하고, 일-학습-자격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충 및 지역단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가평생학습포털과 시·도평생교육정보망 연계를 완료하고, 국가평생학습포털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학습센터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창업, 재취업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콘텐츠를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한국형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대학별·학과별 강점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창조경제 체제에 맞는 특성화 전문대학을 육성하여 국가전략산업·지역연계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백화점식 학과운영 탈피 및 대학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로 개편하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체와 전문대학 간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6		'20
▪ 자유학기제 시행학교(교)	3,213	⇨	3,213 (계속)
▪ 대학정원 조정규모(명) ※ '13학년도 대비 누적	50,000	⇨	80,000
▪ 특성화고 취업률(%)	46.6	⇨	50.0
▪ 행복학습 거점센터 운영수	92	⇨	229
▪ K-MOOC* 강좌수 *한국형 온라인 무료 공개강의	128	⇨	500

▣ 추진배경

○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재정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방식을 정함(Top-down)에 따라 대학의 이념과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데 제약

▣ 중점과제

○ 대학이 건학이념과 특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 대폭 확대

- 평가지표 간소화(정량지표 비중 축소), 예산 집행에 대한 규제 개선, 대학의 사업계획서 자율 공모 및 총액 배분 자율 편성 방식 적용 등

○ 단계적인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 해소

-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합하여 "①연구/②교육(대학특성화) + ③산학협력, ④대학자율역량강화"로 사업구조를 단순화(2019년~)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대학의 연구·교육역량 강화 및 특성화 유도

○ 사회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창업 연계 강화

○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연계 강화

▣ 추진배경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 아울러,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 주요사업내용

○ (Ⅰ유형)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등록금 기준 지원액 520만원을 소득분위별 일정비율 지원

○ (Ⅱ유형)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 지원

○ (다자녀) 2014년 이후 입학자 중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에 대해 연간 450만원 장학금 지원(단, 기초~소득2분위는 520만원 지원)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정부와 대학의 분담 구조하에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추진배경

○ 계약학과와 주문식 교육과정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교육과정을 사회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 중점과제

○ 기업과 대학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맞춤형학과(특히, 주문식교육과정) 교육모델을 확립하여 채용 연계성 강화

- 산업체와 학생 공동선발, 교육과정 및 교재 공동개발, 산업체 전문가의 교육 참여, 교육과 채용 연계 등

○ 사회맞춤형학과 운영에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제도 개선을 포함,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 지역에서의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참여 유도와 지역대학-기업-지자체 간 협력체제 구축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산업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률 제고

○ 산업체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산업체 기술경쟁력 향상

○ 산업체 인사의 교육 참여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가능

정책해설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 추진배경

○ 후진학자가 언제 어디서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형성 지원

○ 교육개혁 6대 과제인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 운영에서 탈피, 성인 친화적 체제로 발전하도록 유도

▣ 주요 내용

○ (개요) 기존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및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여 대학의 자율적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대학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활성화 운영 모델을 창출하도록 지원

○ (운영과정 및 학생모집) 지역사회 및 평생학습자 수요에 기반하여 학과 개설 및 운영

○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평생학습자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및 기초능력 향상과정 운영, 평생학습자 맞춤형 학사 관리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권역별 운영 대학 지원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기회 확대

○ 야간·주말 강좌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 운영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지속적 투자 확대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의 기본방향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더 많은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문화기본법」(2014.3.31.) 및 「지역문화진흥법」(2014.7.29.)을 제정·시행하여 문화융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8년 ‘문화재정 2%’달성을 목표로 정부재정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에 따라, 2011~2015년간 문화분야 재정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9.8%대로서 정부 재정투자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문화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 문화분야(조원)	4.2	4.6	5.0	5.4	6.1	9.8%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

국민들의 문화참여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시설 이용할인 혜택 등을 적용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인지도 상승 등, 점차 많은 국민들이 평일 문화향유의 계기로 삼고 있다.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14년) 19% → (’16년) 57.6%

보편적 문화향유권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이루어졌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영화·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여행 등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시행되고, 2015년 7월에는「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혜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의 범위가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혜 범위도 확대되었다.

도서관·박물관을 활용한 인문학 교육사업인 '길 위의 인문학', 세대 간 소통으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생나눔교실' 사업, 독서와 예술을 매개로 인문적 가치를 체험하는 '인문예술캠프'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인문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존중, 나눔과 배려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였다.

창조산업 확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콘텐츠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의 육성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영화·게임·대중음악·패션·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사업화에 이르는 全단계에 걸친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경쟁력있는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쟁력이 확보된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펀드 출자, 콘텐츠 가치평가 도입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융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왔다.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 2015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00조원, 수출액은 58조원으로 2011년 대비 각각 19.9%, 35.6% 증가하여,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성장잠재력 둔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의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 콘텐츠산업 매출액 : ('11년) 83조원 → ('15년) 99.5조원
* 콘텐츠산업 수출액 : ('11년) 43조원 → ('15년) 58.3조원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균형 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체육분야에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여 일상 속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종합형 스포츠클럽,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확충하고,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지원하여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였다.

* 주1회 생활체육 참여율 : ('12년) 43.3% → ('15년) 56%

전문체육 지원도 강화해왔다. 2012년부터 지원해온 국제수준의 진천 국가대표 종합훈련장(2단계)이 2017년 9월 준공되면서 국가대표 훈련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및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국내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여행주간 캠페인을 전개하고, 창업지원 및 우수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상품개발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3대문화권 및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 등 광역관광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등 지역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해외시장별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의 적극적인 전개, 한류연계 전략적 해외 홍보활동 강화, 테마별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여 중국 등 외래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국제회의업(MICE), 의료관광,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외래관광객 : ('11년) 980만명 → ('15년) 1,323만명 (35.0% 증가)
* 관광수입 : ('11년) 123억불 → ('15년) 152억불 (23.6% 증가)

콘텐츠산업 성장세 둔화, 예술분야 산업화 미흡

최근 게임산업 등을 비롯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일자리 창출 수도 감소하는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게임, 의료·교육 등 기능성 게임과 같은 융복합 게임콘텐츠 육성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지원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체육분야는 통합체육회 출범을 계기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유기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2016년 리우올림픽 결과 육상, 수영 등 기초종목이 부진함에 따라 전문체육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술분야의 경우 예술가들의 일자리 및 수입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수요 창출 등 산업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관광분야의 경우 관광객·사업체는 증가추세이나, 매출액 및 고용규모는 정체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강소·중견 관광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매출규모(조원) : ('12) 23.6 → ('13) 23.3 → ('14) 22.6 (연평균 △2.1%)
* 고용규모(만명) : ('12) 22.9 → ('13) 22.7 → ('14) 23.0 (연평균 0.2% 증가)

또한 2001년 이후부터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국민들의 해외여행 증가세가 국내여행에 비해 높은 편으로 국민들의 여행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도 필요하다.

* 국민해외여행 규모(천명) : ('11) 12,694 → ('15) 19,310 (연평균 11.1% 증가)
* 국민국내여행 규모(천명) : ('11) 35,013 → ('15) 38,307 (연평균 2.3% 증가)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정부는 2018년 예산기준 '문화재정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늘어나는 국민여가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제조업 중심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문화재정 투자는 중요성을 갖는다.

생활 속 문화접점 확대로 국민체감도 제고

지역민의 자발적 문화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문화가 있는 날」의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약 2천여 개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예술인이 전국 각지에서 공연을 펼치는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해 청년예술인들에게 경험을 쌓고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6년 2월「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인문정신문화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 제공할 것이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주요 국립박물관을 휴관 없이 운영한다. 또한 대표 인문프로그램인 「길 위의 인문학」, 「인문독서아카데미」를 확대하고 도서관·박물관과 연계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단가를 인상(5만원→6만원/1인)하여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접근성 확대와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먼저 지역의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주도형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생활문화센터가 100개소 이상 조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모듈형 이동식 컨테이너 개념으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도 신설하여 국내외 문화소외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및 콘텐츠를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2016년부터는 특정 장르에 제한받지 않는 융복합 콘텐츠의 자생적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구축하였다.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로 이어지는 주요 거점을 조성하고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에서 제작, 인재양성과 재투자에 이르는 全단계를 원스톱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2017년에는 소비·구현 인프라 조성을 완료하고, 프로그램 고도화, 지역과 해외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할 예정이다.

게임, 가상현실 콘텐츠 등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017년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을 신설(192억원)한다. 게임분야는 첨단 융복합분야 등 제작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능성 게임 제작, 게임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한다.

이미 시장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등 간접지원을 확대한다(2016년 360억원→2017년 800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및 생활체육 저변 확산

2017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D-1년을 맞아 정선 알파인 경기장, 진부역 진입도로, 동홍천~양양고속도로 등 대회관련시설을 적기에 완공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D-365일 등 주요 계기별로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전통 소재를 활용한 오페라, 발레 등을 제작하여 올림픽 전후에 공연하는 등 문화올림픽을 본격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우리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체험관, 사물인터넷 시현단지 등을 조성하여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계획이다.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해외전지훈련, 경기장 적응훈련 확대, 최고수준의 외국인 코치와 장비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경기력 향상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및 저변 확산을 위해 영국, 독일 등 축구강국의 프로-아마 통합리그제(디비전 시스템)를 도입(2017년 신규, 28억원)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증원(324→400명),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의 교통비(월 10만원) 신규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의 단가 인상(월 7만원→8만원) 등 저소득층의 스포츠 강좌 이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 세계 1억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태권도 수련 인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프리미엄 상품개발, 관람형 태권도 도입 등 태권도 시장 조성 및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을 추가 조성(1→2개소)하고 스포츠펀드 정부출자를 확대(200→300억원)하는 등 스포츠산업을 중점지원할 계획이다.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

관광분야에서는 지역별 관광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핵심 10개 권역을 지정하여, 권역별 관광자원(관광지, 숙박, 음식점, 특산품 등)을 고품격으로 개선하고 관광객 동선에 따라 관광요소별로 코스화·상품화하여 차별화된 명품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하고자 한다.

또한, 외래관광객 유치에 한류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뷰티, K-드라마, K-Pop 등 한류와 연계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대표적인 한류거점 조성을 위한 K-컬처존을 조성·운영할 것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미용・건강・휴양・한방 등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 예산을 신규반영하고, 국제회의(MICE), 의료관광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초기 창업 관광기업을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 펀드 유치지원, 융자사업 확대 등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확대

문화재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 문화재 보수정비 위주의 사업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경복궁 궁궐축전(20→30억원), 생생문화재, 향교, 서원을 활용한 지역 문화재 활용 체험프로그램(73→115억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창덕궁 달빛기행을 49일에서 120일로 확대 운영하여 일반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근대건축유산 및 고택을 활용한 숙박시설 구축・운영 신규 지원(K-heritage Inn으로 브랜드화, 48억원) 등 고품격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문화·체육·관광 분야**	6,630	7,085	8,079	8,354	8,638	6.8
○ 문화예술	2,632	2,828	3,132	3,128	3,158	4.7
○ 관광	1,411	1,651	2,037	2,035	2,053	9.8
○ 체육	1,539	1,498	1,542	1,785	1,982	6.5
○ 문화재	731	774	921	940	956	6.9
○ 문화 및 관광일반	317	333	447	466	489	11.4

* '16년은 국회확정 예산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문화융성 발전소', 문화창조융합벨트

융·복합 콘텐츠가 기획-제작-구현-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차질없이 지원, 성과를 가시화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첨단문화컴플렉스 K-Culture Valley(2017년말, 고양), K-Pop 상시 공연을 위한 대형아레나 공연장 등 소비·구현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창조아카데미를 확대 개원하여 콘텐츠 산업의 핵심자원인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간다.

이와 동시에 해외 유망스타트업 유치·입주공간 조성, 국내기업과 협업 지원으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허브를 육성하고, 지방에 문화벤처단지를 신규 조성하는 등 융복합콘텐츠 생태계를 해외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을 대표할 대규모 공연작품 제작 및 공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후 대규모 공연작품 제작·공연을 통해 문화올림픽을 실현하고, 한국적 소재와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공연작품을 제작하여 대한민국 대표 공연 관광상품으로 개발·육성한다.

오페라, 발레단은 기존 작품을 활용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대규모 작품을 공연하며, 이와 동시에 3개년 계획으로 대규모 창작 공연작품 제작을 추진한다.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국악공연, 창극 등 전통작품 개발, 공연을 하며 3D영상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대형무대를 제작할 예정이다.

지역관광콘텐츠 개선을 위한 '핵심관광지 육성'

국내관광의 수도권 및 제주도 집중으로, 지역관광 육성의 필요성 및 관심도는 커지고 있으나, 관광객의 눈높이에 비해 지방의 관광환경은 미성숙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0개 권역을 선정하여 권역별 숙박·음식·볼거리·교통을 관광객 동선에 따라 진단하고 관광요소별로 종합개선하여 코스화·상품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권역은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권역 진단→부문별 심화 컨설팅→관광시설 개선·프로그램 개발 등→관광코스 홍보·마케팅'의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아마 통합리그제 운영을 지원

2017년부터 영국, 독일 등 축구강국의 프로-아마 통합리그제(디비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및 저변 확산을 지원한다. 우선 2017년에는 기초 지자체를 기준으로 142개 리그(1리그당 6개팀), 852개팀이 참여하는 기초리그의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7개 광역리그, 2019년에는 전국 최강 리그를 구성하는 등 아마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명실상부한 프로-아마 통합리그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문화재정의 양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낭비적 재정지출의 증가 또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분야별로 명확화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산 불이행 등 문제가 있는 단체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관례적·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보조사업은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고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 되거나 단순 지역 배분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지역예산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추진토록 유도하여 지자체 수요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6년		’20년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72.0	⇨	74.0
▪ 문화콘텐츠산업 매출규모(조원)	105	⇨	131
▪ 관광수입(억불)	188	⇨	263
▪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이상, %)	56.6	⇨	60
▪ 문화 기반시설 수(개)	2,598	⇨	3,202

콘텐츠 가치평가

▣ 추진배경

○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국내 콘텐츠기업의 성장은 미약한 수준이다.

* 콘텐츠 기업 중 90%이상이 10-10-10구조(자본금 10억 이하, 매출액 10억 이하, 종업원 10인 이하)인 상태임

○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가치평가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이로 인한 사업화와 창업, 유통-거래로 이어지는 콘텐츠산업 선순환 금융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 개선내용

○ 무형자산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콘텐츠를 담보로 금융투자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가치평가 新모형 개발) 연간 2개 장르씩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서비스를 제공한다.

* 영화·게임('15년), 방송 애니메이션('16년)

- (콘텐츠 산업 정보데이터 시스템 구축) 가치평가와 함께 위험요소를 진단할 수 있는 산업 관련 정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계 및 민간 금융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 기대효과

○ 콘텐츠 가치평가 모형 개발 및 관련 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뢰 있는 가치평가 제공으로 민간 금융권으로부터 활발한 투융자를 유인하여 콘텐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

정책해설 휴일 없는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 추진배경

○ 일자리 창출과 내·외국인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연중무휴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영국 브리티시박물관, 중국 상해박물관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연중무휴 운영 중

▣ 개선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연중 휴관 없이 운영한다.

- (참여기관) 문체부·문화재청 소속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 기대효과

○ 관람편의 증진에 따라 내·외국인 관람객 유치 확대에 기여한다.

- 박물관·미술관이 2015년 외래관람객 주요 방문지 중 7위 차지

<외국인 관광객 방한기간 중 참여 활동>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쇼핑	71.5	74.0	70.9	72.8	69.9
식도락 관광	47.3	46.4	39.0	48.4	46.1
자연경관 감상	30.0	31.7	17.6	13.3	12.2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26.2	27.2	16.2	14.2	14.3
업무수행	12.9	14.3	16.6	16.5	22.8
유흥/오락	11.9	9.2	9.6	8.4	11.5
박물관/전시관 방문	**10.5**	**8.9**	**6.5**	**6.7**	**6.2**
테마파크	8.3	8.9	7.1	5.1	7.0
휴양/휴식	7.6	7.4	8.9	8.6	6.9

* 출처 : 2015 외래관람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연중무휴 운영에 따른 관련 인력 추가고용으로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4. R&D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분야 지원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R&D 기반의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세계 경제가 3%대 성장률의 저성장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주요국은 구조적인 저성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장기 R&D 혁신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R&D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온 결과 꾸준한 투자 증가세를 보이며 현재의 양적 규모를 확보하였다. 정부 R&D 투자는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연평균 5.7%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이는 동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4.7%)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부의 R&D 육성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정부 R&D 예산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R&D 투자 감소라기보다는 그간의 양적 규모 확충에 대응한 질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R&D 분야 투자는 곧 미래를 대비한 투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민간 역할분담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에 집중

그동안 정부는 민간 영역의 투자 유인이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연구, 경제혁신 선도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거대과학, 국민행복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였다. 창의·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집단연구와 국가 지식기반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분야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경제 주역화를 위해 투자 규모와 수혜기업 수를 확대하였다.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과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출효율화를 통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R&D 투자비중은 4.29%(2014년)로 세계 1위 수준이며, 절대 규모도 723억 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하여 경제 규모를 감안한 투자 총량은 안정적 규모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민간의 R&D 투자로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성과는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학기술 경쟁력도 상승 추세이다.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순위(30개국) : ('12) 9 → ('13) 8 → ('14) 7 → ('15) 5
* IMD 과학인프라 순위(60개국) : ('12) 5 → ('13) 7 → ('14) 6 → ('15) 6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편으로 진단된다. 2015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연구개발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30개국 중 26위, 2014년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 정부 R&D 특허의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전체의 0.3%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듯 R&D 투자규모나 활동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질적 수준, 국제적 비교까지 고려할 경우 내실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 R&D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0	'11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정부R&D 투자(조원)	13.7	14.9	16.0	16.9	17.8	18.9	19.1	5.7%

* 본예산 기준(추경 포함시 '13년 17.2조원)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R&D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

정부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따라 2017년까지 총 R&D 투자규모를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연구개발활동조사에 기반한 전망치 적용시 목표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재정은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지출효율화도 병행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기 재정운용 방향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초투자, 미래성장동력 육성, 국민체감형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성과제고와 효율화에 대한 요구에도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대비 투자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책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재정지원 및 R&D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산업 육성

미래 신시장 개척을 위하여 기술혁신에 기반한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5G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스마트자동차 등 18대 미래성장동력의 분야별 단·중기 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핵심 기술 지원(Mission Innovation)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시장 선점을 위해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태동기 바이오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등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의 전략적 육성과 융·복합 서비스 R&D 분야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SW,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물류, 콘텐츠 등 분야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 R&D를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초연구 및 대형 연구 지속 지원

R&D의 근간이면서 민간 영역의 자발적 연구와 투자 유인이 어려운 기초연구와 대형 연구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풀뿌리 기초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신진·선도연구자와 창의성에 기반한 순수 연구개발활동의 지원을 통해 기초연구 투자의 내실을 기할 것이다. 제1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2016~2018)에 따라 ICT·SW, 에너지·자원, 소재, 기계·제조분야 등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거대과학 및 공공 인프라 분야 정부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전적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다양한 분야의 융합R&D를 통해 연구성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국가적 현안과 국민의 수요에 기반한 융복합연구를 확대할 것이다.

인문사회,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학문 및 기술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부처사업의 경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성과의 연계활용 등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전략적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예산요구 단계부터 실질적 협업 유도를 위해 부처 매칭형 방식을 도입하고 협업 상황에 대한 정기적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보건 등 국민체감형 R&D 투자 확대

대형화·복합화 특징을 보이는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건강하고 편리한 국민의 삶을 위하여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식품 전주기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 먹거리 안전과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오염 저감 및 생활 내 유해인자 관리기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기술의 개발로 발생하는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로 함몰 등 사회 기반시설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협요인의 탐지·분석 및 시설물 피해 경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기후변화, 유가변동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측·적응기술에 대한 지원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사회복지 인프라 관련 R&D 지원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 R&D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 증가율
□ R&D 분야	19,094	19,437	19,670	19,930	20,235	1.5
○ 기초·환경·에너지 등	4,515	5,215	5,384	5,542	5,721	6.1
○ 우주항공·생명 등	5,610	5,725	5,522	5,524	5,334	△1.3
○ 기계·제조 등	1,516	1,488	1,578	1,667	1,669	2.4
○ 정보·전자 등	2,498	2,380	2,299	2,414	2,442	△0.6
○ 인력양성 등	4,954	4,630	4,887	4,783	5,069	0.6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R&D 역할 강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 기술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 혁신 및 재편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 개발 중심의 산업혁신에서 기술 집합 및 융합 중심의 산업혁신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개편 추세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R&D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분야는 사회적 관심과 발전가능성을 반영하여 투자를 확대하되, 정부의 지원은 기초원천, 기반조성, 인력양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응용기술에 한정하는 전략적 집중이 바람직하다.

연구성과 및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인력의 유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창업-중소·중견기업-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단계별 R&D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수출 잠재력 및 고용창출 여력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원활한 기업 동반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 지원 연계 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창업과 기업 R&D 지원 연계 강화를 통해 창업 붐과 혁신적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타운 등을 기반으로 한 기술 아이디어 구현, 사업화 및 수익모델 구축 등 제조업 지원 활용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 등 연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규제프리존과 연계하여 지역별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등 혁신센터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센터의 기획기능 강화, 연계사업 수행 확대,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조정 역할 확장 등을 위해 자체채용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선도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행적 지원체계 개선으로 투자효율성 제고

R&D 분야의 전문성과 재정운용 측면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그간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던 국방 R&D 예산편성 방식이 올해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타 R&D 분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예산배분·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나, 국방 R&D는 재정당국에서 직접 편성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도개선 조치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인력양성, 창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복잡다기하게 지원되는 대학 R&D 지원체계 효율화에도 착수하였다. 부처별로 지원되는 과정에서 중복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유사 중복성 등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R&D 사업의 과제 수행기간과 회계연도 간 불일치 현상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R&D 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선이 유발되지 않도록 연구협약기간은 인정하되 정부 예산은 회계연도(1월~12월)에 맞추어 편성하도록 설계하였다.

수요에 기반한 R&D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R&D 성과창출을 위해 실용화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산업계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신기술과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R&D 사업 추진에 있어 시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활용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 기획, 실행,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있어 공급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 및 기업 수요에 기반한 R&D 쟁점 이슈의 논의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의 하나로 정부가 기업에 R&D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바우처를 지급하여 대학·출연연 등의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세부사업 기준으로 0.7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약 80% 이상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동 제도 추진을 위한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산업기술 연구중심 6개 출연연에 민간수탁과제 수주 실적에 비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방식을 지난해 시범 도입하였으며 실적점검 등을 통해 동 제도의 활성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투자 전략성을 뒷받침하는 R&D 제도개선 과제 정비

장기계속사업의 관행적인 계속 사업화를 방지하고 목적지향적 R&D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예산부터 일몰제를 도입하였으며 부처간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추진 중에 있다.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와 함께 성과중심의 구조조정 강화를 위한 제도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지역 R&D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간 재원분담 등 지원조건을 명확화한데 이어, 올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특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R&D센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출연연 본원 외 조직의 무분별한 설치·확장·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등 절차를 강화하였다.

과기계 출연연의 경우 기초·원천 및 거대·공공 출연연은 기관 고유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산업계 출연연은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수탁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연연 연구사업과 부처 R&D 사업과의 역할 구분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료의 효율적인 재투자 촉진의 일환으로 전력기금에서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을 산촉기금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산업부 차원에서 기술료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중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에는 기술료 현황관리 및 제도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6		'20
▪ 정부R&D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	39	⇨	40
▪ R&D 바우처 지원규모(조원)	0.4	⇨	0.8

▣ 추진배경

○ R&D 초기기업, 창업기업 등은 정보·네트워크 부족으로 적합한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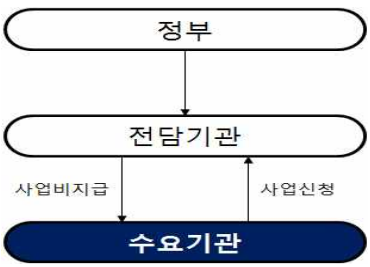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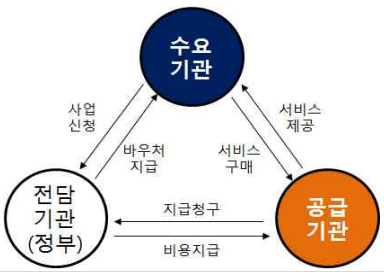
○ 또한, 바우처 과제는 주로 소액·단기과제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출연연 연구자의 참여 유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

▣ 주요 내용

○ 정부가 기업에 R&D자금을 직접지원하지 않고 바우처를 지급, 대학·출연연 등의 R&D 역량·인프라를 활용토록 하는 제도

○ 기업은 자신에게 적합한 R&D서비스 공급기관(대학·출연연 등)을 직접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은 정부가 공급기관에 지급

○ 2016년에 R&D과제 0.4조원을 중소·중견기업 대상 바우처방식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2017년에 세부사업 기준으로 0.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

직접지원(기존)	바우처 지원 (개선)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과제, 공급기관 선정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이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과정에 참여 가능

○ 중소기업 대상 직접 자금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보다 투명한 R&D 자금 운영 기대(목적외 사용 원천차단)

▣ 추진배경

○ 실질적 융합연구 활성화 및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신협업모델(부처매칭형) 도입함으로써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 해당 사업의 명칭과 예산코드를 통일시키고, 신규 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 실질적 협업을 위해 부처매칭형 방식 도입

▣ 주요 내용

○ (기획 및 편성단계) 예산요구 단계부터 실질적 협업유도를 위해 부처매칭형 방식을 도입하고 부처간 사전협의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현 행	<부처매칭형> 도입	개선 후
① 개별 전문기관형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없이 하나의 사업 공동 추진 - 참여부처별 재원분담 - '17년 도입 후 단계적 확대	① 개별 전문기관형
② 단일 전문기관형 - 참여부처별 사업은 별개로 구성		② 단일 전문기관형
		③ 부처매칭형

○ (운영 및 평가단계) 실질적 협업상황에 대한 정기적(예: 분기 또는 반기별) 실적 점검 및 점검결과 차년도 예산배분조정 반영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단순한 공동 및 협동연구 단계를 뛰어넘는 다부처 R&D 사업 추진으로 연구성과 및 투자효율성 제고

○ 기술간, 학문분야간, 부처간 차이를 극복하는 융합연구 활성화

정책해설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 추진배경

○ 대학이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

▣ 주요 사업 내용

○ 대학이 미래 유망분야 등 창조경제를 선도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인재를 양성

- 정원조정 등 학사구조 개편,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학사제도 개편 등을 위해 대학당 평균 50~200억원, 최대 300억원 지원

○ 창조경제와 국가발전전략의 토대인 인문학, 인문정신문화의 중흥 지원

- 인문융합형 학과개편, 모든 학생들에게 인문교양 교육을 실시하는 기초교양대학 등 다양한 유형의 인문대학 발전 지원(시범)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의 인재를 양성

○ 모든 학생들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

○ 학과간 융·복합 등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대학생의 진로역량 강화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지난 5년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총지출은 연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간 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주력산업, 첨단 부품소재, 원천기술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동도 지원해왔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전력난 해소를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도 지원을 강화해 온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적 경기침체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간의 재정투자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로 세계 수출순위가 7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상승(WTO)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에서도 경쟁국 대비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하여 산업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중국의 급속한 제조업 고도화로 우리 주력 산업을 위협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제조업 경쟁력 확보 노력을 가속화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제조업을 혁신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추이 >

	'11	'12	'13	'14	'15	연평균 증가율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조원)	15.2	15.1	15.5	15.4	16.4	2.0%

* 본예산 기준 (추경 포함시 '13년 16.7조원, '15년 18.2조원)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제조업 혁신 강화

한국의 제조업 현실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2016년 정부와 민간을 합쳐 1,245개를 구축하고, 2017년에는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1,750개를 구축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를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여 국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가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곳, 고부가가치 생산의 중심지가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대학 및 기업연구소를 산업단지와 공간적으로 연계하여 인력양성, 교육, 연구개발, 고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융합지구' 조성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신시장진출 지원 및 창업기업의 글로벌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퇴직 무역인력을 통해 수출 컨설팅을 제공하여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해외 바이어 발굴 등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해외 순방을 적극 활용하여 정상외교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확대 개최하고, 참가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정상 외교의 수출 활력 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수출지원기관별로 유사·중복 사업들이 칸막이식으로 양산되던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수출지원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사업을 도입한다. 유망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제공하면, 해당 기업은 바우처에 명시된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서비스 종류 중에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래 신신장동력 발굴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플랜트・로봇・항공・임베디드 SW 등의 분야에 IT를 융합함으로써 창조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 제조원가 상승, 환율 급변 등으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섬유・신발 등 전통산업의 경우에는 異업종간 협력, 제품・공정 개선, 해외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여 혁신주도형 산업으로 재창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와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지원 확대

청년창업, 대학 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난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유망한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보육 등 창업 全 단계를 원스톱(One-Stop) 방식으로 연계 지원하는 '창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창업 단계별로 성과를 점검하여 각 단계를 완수한 창업자에게는 다음 단계의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필요성을 점검하여 신속히 후속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학(원)생들의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창업선도대학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지원내용을 확대해나가고 '17년부터 '대학창업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대학생들의 소액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 창업기업 자금 융자를 확대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창업 → 성장 → 회수 → 재도전'의 중소기업 성장 과정이 막힘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구축·강화할 계획이다.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한다. 대학, 투자자, 연구기관 등과 협업하여 창업자가 가진 아이디어가 더 쉽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디어 검증·사업모델(Business Model) 개발 등을 통해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공한 벤처기업 등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선발하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집중 지원·육성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성장기업에 대한 R&D, 투자자금,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R&D 추진 계획을 컨설팅해주는 사업을 도입하고,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R&D,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전문기업 30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전용의 R&D 사업과 수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재도전 계획을 가진 재기기업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우수한 사업 계획을 가진 재창업자에게 과거 실패원인 분석, 재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까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유망창업 중심 지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성장 주기(창업-성장-재도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지속한다.

창업 주기에는 생계형 업종 중심의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보급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업종별로 상권 정보를 제공하여 창업 희망자가 스스로 생계형·과당경쟁 분야 진입을 자발적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장 주기에는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출·이익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해결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소공인에

대해서는 소공인 특화센터 등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보다는 마케팅, 기술혁신 자금을 직접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도전 주기에는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고, 유망업종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여 과잉진입-과당경쟁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 시장을 육성하고, 빈 점포에 청년상인을 유치하고 '전통시장 청년몰'을 육성하는 등 젊은층이 찾는 활력 있는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도입하여 전통시장 화재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공급체계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수급기반을 조성해나가고자 한다.

우선, 에너지 저장장치(ESS)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지능형 에너지 절감시스템 개발, 에너지 저소비형 기기 개발과 보급,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방향을 공급주도형에서 수요관리 기반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에너지신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향상에도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저소득층 가구가 동절기에 가스·등유·연탄 등의 난방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속 지원하고 가스 등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 등에는 도시가스 배관 또는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 편의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16,264	15,934	15,653	15,400	15,180	△1.7
○ 산업 금융지원 부문	1,600	1,186	1,229	1,234	1,272	△5.6
○ 산업 기술지원 부문	1,257	1,448	1,469	1,448	1,451	3.6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563	582	587	579	583	0.8
○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	8,769	8,807	8,528	8,628	8,635	△0.4
○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3,546	3,365	3,270	2,916	2,613	△7.3
○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부문	529	546	569	595	626	4.3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재정 지출 효율화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수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에 걸쳐「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부터는 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수혜기업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이 정보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원이력정보를 활용하여 부처간 유사·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확산

최근 포스트-2020 체제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안을 확정하였다. 에너지다소비형인 우리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기후변화 대응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초기 시장형성과 민간의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마중물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기능 효율화

유전 및 광구 등의 해외자원 개발에 무리한 투자확대 및 자원가격 하락으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기능의 효율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출자 예산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한국석유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공불융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제도를 신설 도입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6		'20
▪ 수출액(억불)	5,450	⇨	6,131
▪ 국가산단 가동율(%)	81.1	⇨	82.0
▪ 발전설비 규모(MW)	102,722	⇨	119,809
▪ 설비예비율(%)	21.4	⇨	23.2
▪ 도시가스 보급률(%)	81.0	⇨	86.0

▣ 추진배경

○ (**공급**) 다수 기관이 **유사·중복**사업을 **칸막이** 식으로 수행, 공급자(부처, 기관, 민간업체)간 **경쟁시스템 부재**

* (예) '외국어자료 번역·통역' 사업은 무역협회에서만 수행한다고 가정
⇨ 기업은 번역서비스를 다른 전문 번역회사에 의뢰할 수 없는 구조

- 관련 업계 성장,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

○ (**수요**) 기업은 부처·기관별 사업을 **개별 신청**해야 하는 불편

* (예) 수출 초보기업이 종합적 지원을 원할 경우, 4개 사업에 각각 신청
⇨ ① 무역교육, ② 시장조사, ③ 해외전시회참가, ④ 바이어신용조사

○ (**관리**) 공급자 위주 구조로 **성과관리 미흡**, **유사·중복**사업 양산

- 서비스 공급 자체가 사업의 목표이므로, **수출 통관실적**에 따른 성과관리가 없고, 여러 협회들이 **유사사업**을 경쟁적으로 **양산**

▣ 사업내용

○ **선정한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에는 **지원한도**, **복수 지원항목**, **복수 공급기관**을 명시

- 바우처를 받은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수행

<기존 제도> - 해당 사업만 수행

	무역 교육	통역 번역	바이어 발굴	바이어 상담
해외 시장 조사 사업	무역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중진공	민간업체	무역협회	중진공
	민간업체		민간업체	민간업체

⇨

<바우처> - 모든 사업 선택 가능

	무역 교육	통역 번역	바이어 발굴	바이어 상담
바우처 사업				

* ▧영역: 선발된 기업이 선택가능한 서비스 항목·공급자

▣ 기대효과

○ 수출지원기관간 **경쟁이 촉진**되고, **민간**의 **수출지원 서비스 업계**도 **성장**하는 효과도 기대

스마트그리드 확산

▣ 추진배경

○ 그간 정부 주도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주도 실증사업**과 **기기 보급** 등을 추진

* 스마트그리드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

- 본격적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모델을 **실제 환경에서 구현할 필요**

* 제주실증사업('09.12~'13.5, 170여개 기업 참여)을 통해 153개의 신기술을 검증하고 45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지능형수요관리 등 사업화 추진

▣ 사업내용

○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을 활용하여 전력 공급·소비 효율화 및 전력판매 신산업 추진

스마트그리드 확산

구 분	사업 내용	지원 목표	비고
지능형 전력소비 효율화	에너지 다소비 시설(빌딩, 공장 등)을 대상으로 EMS 등을 구축하여 효율적 전력소비를 유도	빌딩·공장 494개소	개소당 3억원
지능형 전력공급 효율화	연료전지 등을 통해 에너지 자족화를 실현하고, 전력사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수요맞춤형 발전소 운영 추진	연료전지 등 40.2MW	MW당 56억원
지능형 전력판매 신산업	소비자(아파트·상가 등)를 대상으로 AMI를 보급하여, 다양한 요금제에 따라 전력을 판매하고 부가서비스를 제공	아파트·상가 15만호	호당 28만원

▣ 기대효과

○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향상, 대체에너지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창출 가능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추진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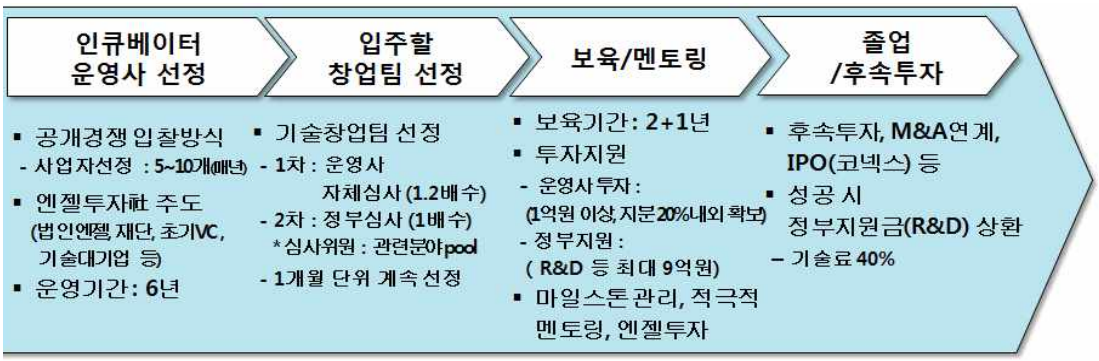
○ **고급인력의 기술창업 도전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고,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

▣ 사업내용

○ 성공벤처인, 기술대기업이 주도하는 엔젤투자社를 통해 유망한 창업팀을 선별하고 **엔젤투자와 연계한 정부R&D 등 지원**

- **투자-보육-R&D-해외마케팅** 등 최대 10억원 투자 · 지원

○ **초기자본 없는 기술창업팀**에게 **과감한 도전 기회를** 제공하도록 **엔젤투자社의 선별능력과 인큐베이팅 능력 활용**



▣ 기대효과

○ **대학, 출연연, 기술대기업 등에 잠재하는 기술인력에게 창업 도전 기회** 제공

-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

○ **엔젤투자, M&A시장, 벤처캐피탈 후속투자 시장 활성화** 효과

6. SOC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편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생산요소로 과거부터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정부는 성장잠재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과 수자원,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 다양한 SOC 시설을 적기·적소에 공급하는데 주력해왔다.

이러한 SOC에 대한 투자는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시에 있어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최근에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SOC 부문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내수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1970년대 이후 SOC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결과 SOC 스톡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G20 국가들 가운데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연장 3위, 철도 연장 6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건설 위주의 SOC 투자에 치중하다보니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제는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복지 부문의 재정지출 소요가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SOC 투자여력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SOC 투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꼭 필요한 핵심 사업 위주로 투자하는 등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SOC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2	'13	'14	'15	'16	연평균 증가율
* SOC 분야(조원)	23.1	24.3	23.7	24.8	23.7	0.7%

* 본예산 기준(추경 포함시 '13년 25.0조원, '15년 26.1조원)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주요 교통시설 투자효율성 제고

그간의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SOC 스톡이 상당히 확충되었으므로,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핵심 사업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시에도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고규격, 과잉설계를 방지하고 교통수요 등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도 및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수익성 저하로 다소 위축되어온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SOC 투자여력을 보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안산선 철도의 사례와 같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신규사업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에 새롭게 도입한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다양한 방식의 민자유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검토 초기 단계부터 민자 적격성 등을 검토하여 조기에 민자 투자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다.

* (위험분담형) 사업에 대한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일정비율 분담
* (손익공유형) 정부가 최소 사업운영비를 보전하고, 초과이익을 공유

핵심 교통인프라 적기 확충

정부는 도로, 철도 등 국가교통망계획에 따른 주요 교통인프라 시설 확충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 물류비용의 절감을 유도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고속도로 연장 : ('16) 4,446→ ('17) 4,777 → ('20) 5,131㎞
* 철도 연장 : ('16) 4,254→ ('17) 4,375 → ('20) 5,001㎞

특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업 위주로 철도 노선을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동해권을 연결하기 위해 춘천-속초간 노선을 건설하고, 인천발 및 수원발 KTX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직결 노선을 건설하여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수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 확대와 중국인 관광객 확대 등 항공여행의 증가로 영남지역 및 제주지역에 대한 항공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제주 및 김해에 신공항을 건설하고, 대도시권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도로 및 광역·도시 철도, GTX 등을 확충하면서 교통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선박 대형화 등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부산항 등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물류 중심 항만으로 지속 육성하면서, 부산·인천·목포 등 배후단지를 종합 물류공간으로 활용하여 항만 이용률을 제고해나갈 것이며, 부산항 등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 전국항만 물동량 처리목표(억톤) : ('16) 15.1 → ('17) 15.6 → ('20) 17.1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1990년대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도입된 이후 SOC 시설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향후에는 이러한 SOC 시설 노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존 SOC 인프라중 노후된 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터널 및 교량 등에 대한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취약 도로구간을 정비하는 한편, 노후 철도선로 및 교량 개선 등 안전투자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발생에 대응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진 및 수해 등에 대비한 댐 안전도 제고를 위해 치수능력 증대 및 기존 댐의 비상방류시설 신설 등을 지속 추진하여 수해예방 능력을 더욱 확보해나갈 것이다.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정부는 향후 자율주행차, 드론 등 첨단 미래 교통수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의 노후산단 재생, 산단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도 구축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항만 배후도로 등 인프라도 적기에 공급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공업용수도 관로(km) : ('16) 1,114 → ('17) 1,117 → ('20) 1,202

< SOC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SOC 분야	23,695	21,762	20,343	19,298	18,473	△6.0
○ 교통 및 물류	19,819	18,255	16,884	15,837	15,696	△5.7
▪ 도로	8,341	7,413	6,706	6,308	6,282	△6.8
▪ 철도·도시철도	7,465	6,804	6,385	5,782	5,739	△6.4
▪ 해운·항만	1,800	1,742	1,547	1,470	1,396	△6.2
▪ 항공·공항	164	141	220	230	241	10.1
▪ 물류 등 기타	2,049	2,155	2,026	2,048	2,037	△0.1
○ 지역개발	3,876	3,507	3,459	3,461	2,776	△8.0
▪ 수자원	2,150	1,861	1,782	2,098	1,660	△6.3
▪ 지역 및 도시	1,099	1,165	1,277	1,081	921	△4.3
▪ 산업단지	628	481	400	283	195	△25.3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도로 투자 효율화 및 안전 투자 강화

정부는 기존에 확충된 도로 스톡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신규 도로 개설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도로의 용량 보강 및 교차로 개선 등 시설개선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사업추진 단계에서도 설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과잉 설계를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은 교통수요 및 위험도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확보된 구간 위주로 추진하고, 계속사업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상비 집행 지연 및 공기 연장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해나간다.

광역도로 및 혼잡도로 등 지자체 재원분담을 전제로 추진되는 도로건설사업은 각 도로사업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 지원하고, 지자체와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지원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협의·확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광역도로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구간 지정

철도 네트워크 구축 및 철도운용 효율화 추진

정부는 춘천~속초철도 건설 등을 통해 주요 거점간 고속 이동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원~인천 복선전철화 등 광역철도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울산신항 인입철도 등 산업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철도 노선도 확충하는 한편, 개량 사업 확대 등 노후 철도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에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단위선로사용료 도입, PSO 운영 개선 등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선로사용료 : 운영자(철도공사)가 철도시설을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철도시설관리자(철도시설공단)에게 납부
*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할인 및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적자 보전

단위선로사용료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는 운영자(철도공사)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일정비율을 부과하고 있는 방식이나, 철도 운영자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여 선로의 노선, 시간대, 시즌 등에 따라 선로사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단위선로사용료 체계로 변경할 계획이다. 2014년 개최된 철도산업위원회에서는 2016년부터는 현재의 방식을 폐지하고 단위선로사용료로 사용료 부과방식을 개선하도록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단위선로사용료의 도입은 단순히 철도시설공단의 고속철도 시설 부채를 상환하는 재원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 철도산업 전반에 있어 경제적 유인에 의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위선로 사용료의 도입은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철도공사의 전반적인 서비스 및 수익 증대로 이어져 철도시설공단의 막대한 부채를 원활히 상환토록 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서비스에 대한 PSO 지원의 경우 교통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다만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소득수준 증대에 따른 자가용 보유율 증가 등 변화된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벽지노선의 경우는 대부분 존치 필요성이 낮아졌으므로 단계적 축소가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벽지노선에 대한 PSO 재정지원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수요에 맞는 공항개발 및 항공서비스 개선

저비용 항공사(LCC)의 공급능력이 증가하고,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 인천뿐만 아니라 지방공항의 항공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거점별 공항 SOC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거점공항과 멀리 떨어져있는 낙후지역의 접근 교통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리 인프라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항공기의 공항접근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미래 대응형 무인항공기 개발 및 시범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신기술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정부는 교통분야 신기술인 ITS(지능형교통시스템)를 활용하여 우회도로 안내, 돌발상황 발생시 처리시간 단축, 전국 고속도로 스마트톨링 설치, 도심구간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 혼잡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 라이다(LiDAR) 등 첨단 장비를 도로관리에 적용하여 시설물의 상태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지하공간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탐지하는 레이더투과 검사기, 3D 스캐닝 등 최신 비파괴 장비를 도입하여 도로함몰(싱크홀)에 대비하는 한편, 보수·개량의 최적시기를 결정하는 최신 관리기법 도입을 통해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원체계 개선

노후 산업단지의 경우 정주여건과 입주여건을 개선하여 생산 여건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으나, 산단 재생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재생사업 추진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민간참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재정지원 최적수준으로 재생사업지구 규모 제한, 규모별 지원기준 신설, 국고지원 시기 조정, 민간투자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재생사업이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재정편입

정부는 재정외로 운영됨에 따라 그 동안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왔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2017년부터 정부 재정으로 편입하여 동 분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6년 중 법령 개정과 예산편성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을 신설하고 2017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운용규모 : ('16) 839 → ('17) 811 → ('20) 800억원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6		'20
▪ 고속도로 연장(km)	4,446	⇨	5,131
▪ 철도 연장(km)	4,254	⇨	5,001
▪ 항만 물동량(억톤)	15.1	⇨	17.1

1 자율주행차 상용화

○ (**개념**)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고속도로 등 제한된 구간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지원 추진



○ (**기대효과**) 향후 10년간 자율주행시스템 시장 성장으로, 약 23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8만명의 취업유발

-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의 획기적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통행시간 업무·여가 활용에 따른 삶의 질·생산성 향상

2 드론 산업 활성화 및 안전증진

○ (**개념**) 드론 산업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드론 관련 창업·기업지원 허브 구축·지원

- 공공 등 유망 활용분야 드론 성능개선을 통한 실용화 지원 및 안전성 테스트를 통한 안전기준 연구

- 창조경제벨리(판교) 내 드론 창업·기업지원 허브 구축·지원

○ (**기대효과**) 드론 운영을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무인항공안전체계 구축 및 안전한 사용 문화 정착과 저변확대

- 또한, 초기 단계인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을 통해 산업 활성화 촉진 및 드론 운영환경 개선

정책해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개요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개요**

○ **(기금개편)** 세입·세출 외 특별회계 형태로 운영되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으로 개편

- 분야별 특성에 맞게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 의무보험관리전산망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및 국민안전에 관련된 분야 지원

○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3항 신설

○ **(기금조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으로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하여 조성

□ **기금 편입에 따른 환경 변화**

○ **(편성)** 분담금관리자인 손해보험협회가 차기년도 예산수립
⇒ 국토부장관(기금관리주체)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

○ **(확정)** 국토부장관의 승인 ⇒ 국회의 심의·의결

○ **(변경)** 국토부장관의 승인 ⇒ 지출금액 20%이상 변경시 국회 심의·의결

* 지출금액이 20% 미만인 경우, 기재부장관 협의 또는 자체 변경

□ **주요 사업**

○ **(피해자 지원사업 부분)**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 후유장애인의 빠른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시설 건립 지원 등

○ **(정부보장사업 부분)** 무보험·뺑소니 사고피해자 보상 관련 지원, 미반환가불금 보상지원,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 분담금 관리

○ **(국립교통재활병원 부분)** 사고 후유장애인의 집중 재활치료로 장애 방지 및 빠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지원

○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운영 부분)**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의 효율적 관리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관련 정보제공 등

7. 농림·수산·식품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최근 5년간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연평균 2.3% 증가하였다. 농림부문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중점을 두었으며, 재해예방・가축전염병・식품안전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농식품분야 재해대응능력을 보강하였다. 또한, 농민 생활안정과 노후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특히 2013년에는 박근혜정부 농정 로드맵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전업농, 중소농, 영세 고령농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다. 전업농에 대해서는 ICT 보급 등 첨단화와 규모화·전문화로 수출경쟁력이 있는 핵심경영체를 육성하고, 중소농에 대해서는 조직화 및 6차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하였다. 영세고령농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수산 부문 역시 최근 5년간 2012년 1.7조원에서 2016년 2.0조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정 확충을 통해 수산물 수출 지원, 첨단 양식기술 개발, 과학적 수산 자원 관리, 수산 식품산업 육성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어촌 6차 산업화, 귀어귀촌 활성화, FTA 대책 등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왔다.

산림 부문은 사방사업 등 재해예방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여 백두대간수목원・치유단지, 휴양림 조성 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 공급을 확충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투자 추이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 농림·수산·식품분야(조원)	17.6	18.1	18.4	18.7	19.3	2.3%

* 본예산 기준(추경 포함시 '15년 19.8조원)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경제의 활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전체 인구에서 농어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젊은 층의 농촌유입이 정체되면서 농촌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최근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 수준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 농림어업분야 비중(명목GDP 대비) : ('10) 28.3조원(2.2%) → ('14) 32.7조원(2.1%)
* 농어가인구(총인구 대비) : ('10) 323.4만명(6.5%) → ('15) 269.8만명(5.4%)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농어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을 강화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영농 규모화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ICT 융복합 등 생산기반시설의 첨단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장개방은 농어업의 위기인 동시에 농축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FTA를 활용해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할랄시장 등 해외 유망시장 발굴 노력을 강화하고, 수출전문단지 육성 및 주력 수출상품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인증 등의 절차적 문제는 물론 제품생산에서 운송, 판매 등 수출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컨설팅·법률자문, 수출박람회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농식품 수출액 : ('15) 61억불 → ('16) 81억불 → ('20) 100억불 이상
* 수산물 수출액 : ('15) 19억불 → ('16) 23억불 → ('20) 40억불 이상

농어촌경제 활력 제고 및 농어촌복지 증진

농어촌 고령화 및 공동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어촌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인력과 자본이 농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우선,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농식품 벤처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창업보육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젊고 창의력이 넘치는 우수 인력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고·농대를 개편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신규취농, 농지임대, 창업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초기 농촌 정착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귀농·귀촌 가구수(누계) : ('16) 34.9천농가 → ('18) 39.2천농가 → ('19) 40.8천농가
* 귀어·귀촌 가구수(누계) : ('16) 2천어가 → ('18) 4.5천어가 → ('19) 5.9천어가

이와 함께 열악한 생활인프라가 인력 유인의 주요 제약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지자체가 원하는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집고쳐주기, 농어촌마을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농업인 행복버스(의료·문화지원) 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함께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후생활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밭농업직불금, 쌀직불금 등 다양한 직불제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영세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어가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수입보장보험 및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농어민의 가입을 촉진하는 등 농어가의 자발적인 책임성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농업재해보험 가입품목 : ('16) 66품목 → ('18) 71품목 → ('20) 73품목
* 어업재해보험 가입품목 : ('16) 24품목 → ('18) 27품목 → ('20) 27품목

또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시중금리와 연계하고, 농어업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 노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어업을 단순 1차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유통·관광 등을 발전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 활성화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종자, 식품, 가공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어가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산물 가격안정

농가가 적절한 가격을 받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싼 값에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웰빙 트렌드와 농촌관광 활성화로 로컬푸드에 기반한 직거래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직거래,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방식의 직거래를 확대할 예정이다. 산지 계열화·조직화 등을 통해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축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생산량 과잉시 농산물 매입, 과소 생산시 농산물을 방출하는 등 식탁물가와 밀접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채소류 생산안정제를 확대하여 계약농가에게 사전면적·재배시기 조절 등을 유도함으로써 사후적으로 관리되던 농산물 가격안정정책을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농림수산식품분야	19,395	19,514	19,395	19,311	19,277	△0.2
○ 농업농촌	14,518	14,525	14,410	14,473	14,501	△0.03
○ 수산어촌	2,032	2,097	2,106	1,960	1,898	△1.7
○ 식품업	820	849	832	830	829	0.3
○ 임업산촌	2,024	2,043	2,047	2,049	2,049	0.3

(3) 중점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FTA 피해보전 및 피해부문 경쟁력 제고

FTA 비준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 수립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를 보전하고 피해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밭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에 대비해서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수출확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뉴 FTA의 경우 낙농 및 한우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개량, 원유소비 촉진 등을 지속 지원하고, 한-베 FTA의 경우 양봉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품종벌 보급용 벌통지원, 전용사료 공급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등 신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주력품목 육성

시장개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시장 선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를 신규 구축하여 현지에서 마케팅, 수출애로 해소, 바이어 발굴, 정보조사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화훼류 등 수출 가능성이 큰 품목을 전략적, 선제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해외정보조사를 통해 수출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맛, 포장 등 상품 현지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할랄·코셔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 중동, 남미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미개척 권역별 수출 전략형 상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단 운영 등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및 냉동·냉장 운송수단 등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중국 내륙지방 등에 국내 신선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농식품의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 위해 국내·외 홍보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즉, 명동, 인사동 등 관광명소에 수출 홍보관을 운영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는 K-Food Fair, 안테나숍, 온라인 마케팅, 제외공관 연계 홍보, 모바일 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위생·검역·통관 등 지원을 강화하고 환율 등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농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식품·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즉, 외식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레스마켓 설치, 외식업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을 육성하고,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도 지속 지원함으로써 산지와 식품·외식업체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전한 식생활을 확산하기 위해 학교급식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는 동시에, 어릴 때부터 바른 식생활·식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영·유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곤충산업 등 신분야 육성,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농업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곤충종자 보급센터 조성, 곤충 유통사업단 운영 등을 신규 추진하고,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체계화를 위해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실태조사 등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인력 및 자본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농어촌 경제를 다시금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농어촌으로 도시자본과 청년 등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을 위해 귀농귀촌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즉, 중앙·지자체·민간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유관기관 통합사무소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온라인 강의 등 특화교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 맞춤형 창업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창업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에 필요한 농지·자금 등 맞춤형 지원과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 및 농업시설 투자플랫폼 구축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을 단순 1차산업에서 다함께 보고 즐기는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지원을 확대하고 6차산업화 지구 조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6차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인증 및 관리, 판로 확충,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서비스 품질 제고, 홍보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가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3차례에 걸쳐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여 농어가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시중금리 변동추세가 정책금리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들녘과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규모화·조직화 촉진을 위해 들녘경영체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즉, 경영체 조직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부터 공동이용 시설·장비, 저장·가공시설 등까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충하고, 우수 임대사업소에 대해서는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가 농기계 구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들녘경영체 개소수 : ('16) 271개 → ('18) 350개 → ('20) 500개
* 밭작물공동경영체 : ('16) 15개 → ('18) 60개 → ('20) 110개

또한 최근의 쌀 재고 확대를 고려해 신규 논 조성은 중단하는 등, 생산기반 조성은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고 밭작물 중심으로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해 농가 규모별·품목별로 첨단형, 복합관리형, 간편관리형 모델 등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농가의 ICT 이해도 및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현장실습 등 기술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단지화·집적화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원예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경제성 있는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ICT 기반 생산·유통, 교육, 문화, 의료 등이 융합된 창조마을 조성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활용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중심 기술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농고·농대의 경우 창조농업선도고교와 영농창업특별과정 신설 등으로 현장 중심의 실습·첨단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농고·농대 졸업생들이 영농에 실제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정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인에 대해서는 실습 중심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교육 실습장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특화 전문교육 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및 재해 대응 체계 강화

구제역, AI 등 대규모 가축전염병이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거점 소독시설을 확충하고, 대부분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특징을 감안하여 주요 도축장에 대해 소독효과 제고를 위한 스팀소독기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등을 통해 상습침수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후화된 저수지,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을 개보수해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분뇨, 악취 등으로 축산업은 환경에 부담을 주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환경관련 규제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시장개방 확대, 소비수준 고급화 등으로 인해 외국산과 차별화된 친환경·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외국과 차별화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친환경농업지구: ('16) 1,174개소 → ('18) 1,214개 → ('19) 1,254개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 축사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산지생태축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뇨·악취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속 지원하면서, 개별농가 위주에서 밀집화·단지화된 지역에 대해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악취 발생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ICT 융합 축산악취 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주요 축산단지에 대해 악취예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정적 수산물 공급 및 수산물 수출확대

순환 여과식, 바이오플록 등 친환경 양식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첨단·대량 생산기반을 지속 구축한다. 반면 자원 남획, 치어 포획 등에 의한 자원감소와 고갈을 방지하지 위해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연근해 어업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비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안정적 수산물 공급을 기반으로 위생관리, 유통, 가공, 홍보 등 각 단계별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산물 이력제 및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고,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조사 실시와 패류 정화시설 지원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단계의 위생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활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활어패류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중국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특화품목 위주의 가공업체를 집적화한 수출 지향적 수산식품거점단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 수출 지원 센터를 확대하여 수출업체 현지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1500톤급 조사선 등 투자를 통해 서해5도, 이어도 등 불법조업이 문제되는 지역의 수산자원을 정밀 조사하고, 어업지도선을 지속 건조함으로써 중국불법조업 대응역량을 강화, 자원안보를 확립한다.

산림자원 확보 및 산림산업 육성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숲가꾸기, 조림 사업 및 임도시설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방사업,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한 예찰 및 방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이상고온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한·중 FTA 등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청정임산물 생산·유통구조 개선 및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6	'20
▪ 농수산식품 수출액(억달러)	104	140
▪ 농촌복지 체감 만족도(%)	60	62
▪ 농업의 6차산업 창업자수(명, 누계)	1,774	3,000
▪ 농수산식품 기술수준(선진국대비, %)	81	90
▪ 스마트팜 도입농가 생산성(%)	27	40

8. 환경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환경기초시설 지속 투자로 보급률 제고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등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위주로 하는 상하수도·수질 부문 예산은 연평균 4.5%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하수도 보급률이 2011년 90.9%에서 2014년 92.5%로 높아졌고, 하수관로 보급률도 2011년 73.4%에서 2014년 77.8%로 높아졌다. 다만, 농어촌 지역 2014년 하수도 보급률은 65.9%로 도시지역 보급률 95.0%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도농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친환경차 판매대수는 2011년 2만대에서 2015년 4.2만대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여 2015년까지 급속충전기 누적 337기, 완속충전기 누적 5,405기를 설치하였다.

폐기물 재활용율 제고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폐기물 선별·재활용 시설 등에 대한 지속 투자로 생활폐기물 재활용율을 2011년 83.7%에서 2014년 84.8%로 제고하였고, 2015년 12월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준공하여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 및 주민 소득 증대의 새로운 농촌개발모델을 제시하였다.

< 환경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1	'12	'13	'14	'15	연평균 증가율
* 환경 분야(조원)	5.8	5.9	6.3	6.5	6.8	4.1%

* 본예산 기준(추경 포함시 '13년 6.5조원, '15년 6.9조원)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노후시설 개량·보수 사업 중심으로 수질개선사업 내실화

2014년 기준으로 상수관로의 31%, 하수관로의 38%, 정수장의 59%가 내구연수인 20년을 초과하는 등 수질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지반침하, 수도관 파열, 누수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개량·보수를 위한 예산을 유지할 계획이다.

상수도 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누수율이 높은 群지역에 대해 1차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성과분석을 통해 이후 市지역 등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기존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 내에서 신설 투자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개량·보수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도농간 격차를 고려하여 농어촌 마을 하수도 등의 사업은 선택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도심지역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 시설 투자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등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동시저감 추구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41㎍/㎥)을 저점으로 상승하고 있고(2015년 46㎍/㎥),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함에 따라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상황이다. 또한 그간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국가배출량(694 CO_2eq백만톤)은 전년에 비해 1.5% 증가하였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친환경차 보급 등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저감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폐기물 재활용·업사이클 산업 육성으로 자원순환사회 견인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제도를 통해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 직매립되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인다. 또,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대신 재활용환경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평가능력을 사후 검증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를 통해 자원재활용을 최적화하는 한편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은 예방하고자 한다.

재활용 증가에 대비하여 폐기물선별·재활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버려진 물건에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 산업을 육성하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해 재활용·업사이클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홍천에서 성공적으로 도입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여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새로운 농촌개발 모델로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지속함으로써 폐기물의 위생적·안정적 처리를 유도하고 농촌 지역 환경오염 및 미관훼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에너지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계 보존·복원을 강화하고, 환경산업 유용기술 개발 지원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 도서, 생태·경관우수지역 등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보존·관리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의 생태관광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자원 이용을 위한 기반을 지속 구축한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출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의 보호·보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사업자에게 협력금을 징수하였다가 생태계 복원 시 환급해 주는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 사업, 도시 내 유휴공간을 생태공원화하는 자연마당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활주변의 생태적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생태관광 성공모델 발굴·확산과 자연환경해설사 증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생태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해 한반도 고유생물자원을 확보하여 유전정보 등을 축적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자일리톨, 타미플루와 같은 생물산업 소재를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된 생물소재는 대량증식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LED식물공장, 노지 순으로 재배 공간을 확장해 양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한다.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강화

모든 신규화학물질이 시장에 진입할 때 유해성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유해성 정보를 수입·제조사가 등록하도록 하는 등 “No-data, No-market" 원칙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아·어린이 대상 대규모 출생코호트를 실시하여 환경인자와 환경성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 환경 진단 및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환경 분야**	68,628	68,681	67,992	67,447	67,062	△0.6
○ 상하수도·수질	43,448	41,373	40,935	40,274	40,033	△2.0
○ 폐기물	3,477	3,453	3,258	3,249	2,751	△5.7
○ 대기	4,215	5,795	5,903	6,342	6,941	13.3
○ 자연	5,680	5,839	5,908	5,669	5,560	△0.5
○ 해양환경	2,411	2,522	2,463	2,463	2,463	0.5
○ 환경일반	9,398	9,699	9,525	9,450	9,313	△0.2

* ’16년은 국회확정 예산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사업

미세먼지 오염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2016.6.2.)을 발표하였고, 이에 맞춰 중장기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DPF 부착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차량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해서는 폐지를 추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성능개선(retrofit)을 계획하였다. 수도권 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1·2종 → 3종 추가)하고,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등 사업장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도로청소차를 확대 운영하며, 건설공사장 등과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공사장 발생먼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의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한-중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장과 미세먼지 관련 친환경상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중국 주요도시의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 공유 확대, 예보모델 고도화를 통하여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유통 중인 생활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강화

2001년~2011년간 (주)옥시 등 11개 회사에서 14종의 제품을 판매하였고,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호흡기질환과의 인과관계를 확정함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정부는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전제로 피해자 우선 구제를 위해 의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여 왔다. 현재까지 1·2차 피해신청자 530명 중 인과관계가 높은(1·2단계) 203명에 대해 37.7억원을 지급하고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37억원)이 진행 중이다.

2015년 2월~12월간 진행한 3차 피해접수 결과 총 752명이 접수하였고, 그 중 1차로 165명에 대해 2016년 8월 판정을 완료하였으며(피해인정 35명), 5월부터 진행된 추가 피해접수 결과 8월 현재 약 3천여명이 접수하는 등 향후 피해접수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증 피해자들에게 당초 지원항목인 의료비·장례비 외에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에 우려가 있는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살생물제(biocide)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추진 중에 있다. 먼저,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국내에 제조·수입하고 있는 8천여개 기업에게 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살생물질 종류 등을 제출받아 살생물질을 목록화하고, 각 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6		'20
▪ 전기차 보급대수(만대, 누적)	17.4	⇨	150
▪ 환경산업체 해외수출액(조원)	8.2	⇨	16
▪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	67.0	⇨	73.6

▣ 추진배경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및 충전인프라 설치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 사업 내용

○ (사업기간) 2010년 ~

○ (사업규모)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충전기 3,000기 보급

○ (지원조건, 2017년 기준) 지자체 보조(정액 보조) 및 직접수행

-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 대당 1,400만원(정액보조)
-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 : 대당 300만원(정액보조)
- 급속충전기 : 대당 5,000만원(직접수행)

▣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16.6월 현재)

제작사	차 종	사 진	배터리 용량(kWh)	1회충전 주행거리(km)	연 비 (km/kWh)
현대	아이오닉 EV		28	191	5.5
기아	RAY EV		16.4	91	5.0
	SOUL EV		27	148	5.0
르노삼성	SM3 Z.E		26.6	135	4.4
한국GM	SPARK EV		18.3	128	6.0
닛산	LEAF		24	132	5.2
BMW	i3		21.3	132	5.9

▣ 추진배경

○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생활환경변화로 환경성질환 지속적 증가

○ 환경노출과 질환 발생간의 인과성 분석 필요

▣ 주요 사업 내용

○ (사업기간) 2015 ~ 2036년(22년간)

- 2015년부터 5년 동안 임신부 10만명을 모집, 태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만 18세) 건강영향 추적조사

○ (조사규모) 총 10만명으로 대규모 및 상세코호트로 구분·추진

- 대규모코호트(9.5만명) : 임신기간에 생체시료(혈, 뇨) 채혈·설문조사 후 건보공단 빅데이터(영유아검진자료, 상병자료 등) 연계 추적

- 상세코호트(5천명) : 임신부·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주기적 건강영향조사(채혈, 설문, 인지·성장발달검사 등), 환경측정 등 구체적 조사

< 연도별 임신부 모집실적 및 계획 >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규모코호트	65,000	5,400	15,000	15,000	15,000	14,600
상세코호트	5,000	1,300	1,700	1,500	500	-

* 3만명은 건강보험공단 표준코호트 DB 등 빅데이터 연계 추적

○ (조사분야) 유해환경인자 노출이 5개 영역(임신·출산, 알레르기, 신경인지발달, 성장발육·내분비계, 사회성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 부처간 협력을 통해 기 구축된 빅데이터(건강보험자료, 학생검진자료 등)를 연계하여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출생코호트사업 추진

○ 환경유해물질과 건강영향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유해물질별 및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 수립, 건강가이드라인 마련·제공

9. 국방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국방비는 최근 5년간(2011-2015년) 연평균 4.5%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력운영부문은 연평균 5.1%, 방위력개선부문은 연평균 3.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2011년 30.9%에서 2015년 현재 29.4%로 감소하였다.

그동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의 구현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및 현존 전력 능력발휘 보장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으며, 병 봉급 인상, 급식 및 군수품 품질 향상 등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특히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를 위한 Kill-Chain /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 등 방위력 개선 주요 대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다.

< 재정투자 추이 >

	'11	'12	'13	'14	'15	연평균 증가율
* 국방 분야(일반회계기준, 조원)	31.4	33.0	34.3	35.7	37.5	4.5%

* 본예산 기준(추경 포함 시 '13년 34.5조원, '15년 37.6조원)

국방비의 특성 상 인건비, 급식·피복, 군수지원 등 경직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재정에 압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방비 지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체계 수립 및 시설·군수 조달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방 R&D예산의 전략적 투자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정예 군사력 건설

미래 전략환경 변화와 다양한 안보위협 속에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전력의 적기확보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북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전력인 Kill Chain/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북한도발 억제를 위한 한국형 전투기(보라매), 차세대 전투기(F-35A), 공중 급유기, 이지스급 구축함 등 첨단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현존전력 극대화

현존전력의 능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GP·GOP 등 접적지역의 작전·경계시설을 보강하고 전투지원시설을 현대화하며, 성과기반군수지원(PBL) 확대 등 핵심 무기체계의 군수지원능력 보장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해 과학화 훈련장비 도입과 훈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장병 생존성 보장을 위한 방탄복·방탄헬멧 등 야전부대 개인장구류 보급도 지속할 것이다. 동원보충대대 작전수행을 위한 부족 물자·장비와 예비군 전투조끼, 예비군 훈련실비 현실화 등 예비군 훈련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장병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복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병 봉급을 2012년 대비 '17년까지 2배 인상 하고, 장병 의식주 생활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병사들에게 질 좋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단가 인상 및 민간 조리원을 증원 운영하고, 하계전투복, 외출용 가방 등 장병들이 사용하는 개인용품을 신규 또는 추가지급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더 나은 품질의 군수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확충,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교육 확대, 병사와 장병가족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방 헬프콜 운영 등을 통해 군 생활 적응 및 사고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프면 적시에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오지 부대에 원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전·평시 외상 및 전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국군외상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국방 과학기술 확보 및 국방비 지출효율성 제고

국방R&D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수출 증대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신규 무기체계 기술개발역량을 확대하고 민간 우수기술과 국방기술을 상호 활용하여 발전적인 방위사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국방 R&D와 민간 R&D간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국방비 소요검증 강화, 사업타당성 조사 등 무기체계 도입 절차에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계약·원가제도의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출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국방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국방 분야	387,995	403,347	418,256	432,477	447,181	3.6
○ 전력운영비	271,597	281,757	291,524	301,436	311,685	3.5
○ 방위력개선비	116,398	121,590	126,732	131,041	135,496	3.9

* '16년은 국회확정 예산기준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북한도발 대비 핵심전력 강화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Kill Chain 전력과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지도발 및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단급 및 대대급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230mm급 다련장, 상륙기동헬기 등 효과적인 대응 전력을 적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보라매), 이지스급 구축함, 차세대 전투기(F-35A), 아파치 헬기 등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첨단전력도 지속적으로 개발·보강할 계획이다.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확장된 작전지역 감시·통제를 위해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을 확충하고, 병력감소에 대비해 기동·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형전술차량 등을 대대급 이하 부대에 보급하여 전투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네트워크화된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확장된 전장 내에서 신속하게 기동하고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차륜형장갑차 및 K9 자주포, 해양통제 및 상륙전 능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 상륙함-Ⅱ 등의 확보를 통해 자주적 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야전부대 전투력 발휘 보장

대대급 이하 전투부대 전투력 발휘와 장병 생존성 보장을 위해 개인천막, 방탄복, 방탄헬멧, 전투배낭, 전투조끼 등 신형 개인장구류를 패키지화하여 GOP사단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적 도발에 대비한 생존성 보장을 위해 전방지역 자주포 포상을 유개화(자주포 진지에 덮개를 덮는 것)하고, GOP 철책 및 주둔지 울타리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다.

적정 군수지원 등을 통한 작전지속능력 향상

차세대 전투기(F-35A), 아파치(AH-64 공격헬기) 등 신규 도입되는 핵심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적정 군수지원을 보장하고, 군수지원의 일정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을 확대해 수리부속의 조달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군 물류 표준화 및 노후화된 정비고·탄약고·창고 등 작전지원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작전지속능력을 향상할 것이다.

실전적 교육훈련과 예비전력 강화

실전적 교육훈련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중대급 마일즈장비, 시뮬레이터 등 모의훈련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육군 군단·사단급 실전적 훈련장, 해군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공군 기지방어종합훈련장 등 정보화·첨단화된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예비군의 상비군 수준의 전투력 발휘 및 훈련여건 향상을 위하여 방독면·전투조끼 등 예비군 전투장구류를 보강하고, 훈련 실비를 현실화 하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장병 의식주 질적 개선

기존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군 취사식당을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념의 위생적 취사식당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급식비 단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특수근무자(잠수함 승선자, 지뢰탐지작업병 등)에게는 증식을 제공하며, 어머니 정성이 담긴 음식 제공을 위한 민간조리원을 확대하는 등 급식의 맛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병영생활관 에어컨 전체 내무반 보급, 병 하계 전투복 추가지급, 외출용 가방·동계 생활모·샴푸 등 사병용품 추가지급 및 단가인상 등으로 장병들의 체감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진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격오지 부대와 의무사령부 응급환자 지원센터를 원격으로 연결하여 진료하는 원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전·평시 외상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국군외상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보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산학연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여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래 핵심전력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기술 및 부품을 개발한다. 국방과 민간 R&D를 융합한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국방전력 강화를 위한 기술확보 및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 외국에서 기술이전이나 판매를 기피하는 주요 핵심부품 및 국방SW의 국산화를 전략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주적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대체, 매출·고용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튼튼한 방위산업 기반을 육성할 것이다.

국방비 지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군 주거시설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따라 군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체계를 수립한다. 병영생활관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부대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동성과 유연성이 뛰어난 건립 방식으로 건축방식을 변경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한다. 관사는 신축시 비용이 많이 들고 부대가 이동할 경우 유휴시설로 남을 우려가 크므로 전세자금 이자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출 효율성을 제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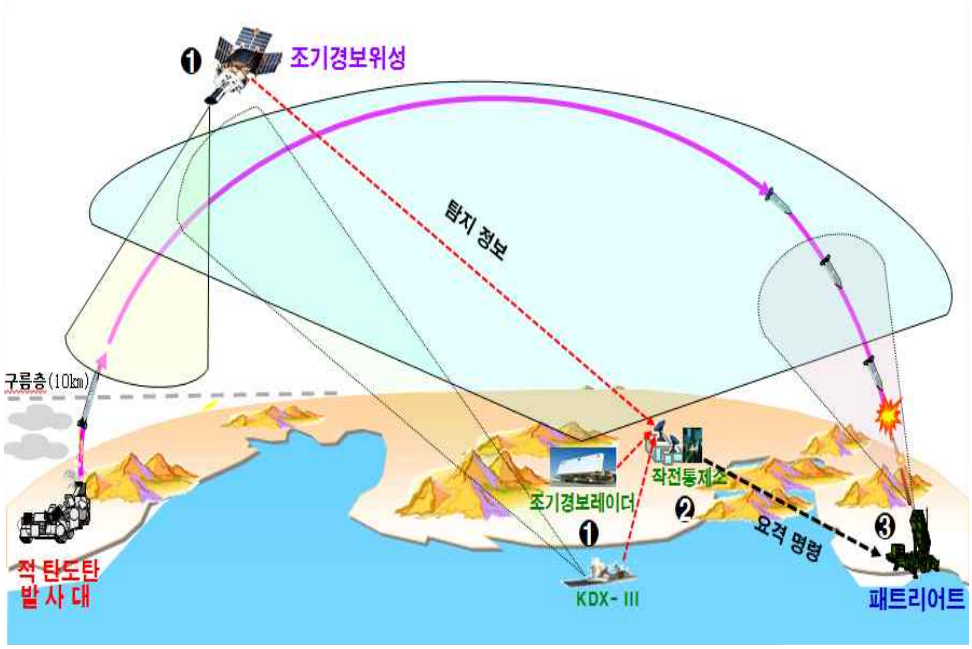
또한 국방사업의 전반적인 비용효과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을 기존 방위력 개선 분야 사업에서 전력유지 분야 사업까지 확대하여 시설·군수 조달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한다. 시설사업 설계단계에서의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등을 도입하여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한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6		'20
▪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	30.0%	⇨	30.3%
▪ 간부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 (간부비율)	30.9% (19.3만명)	⇨	36.6% (20.8만명)
▪ 민간조리원 운영	110명 이상 취사장당 1명	⇨	50명 이상 취사장당 1명
▪ GOP 소초생활관 개선	311동 (93.1%)	⇨	334동 (100%, 18년)

KAMD



운 용 개 념

❶ 조기경보위성,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등에 의해 발사된 적미사일 탐지

❷ 탐지된 정보(발사지점, 비행경로, 탄착지점 등)는 작전통제소에서 통합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위협 분석 및 최적 요격부대를 선정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탐지정보를 패트리어트 포대로 전달

❸ 요격명령을 받은 해당 패트리어트 포대는 탐지된 표적정보를 이용, 자체 레이더로 탐색, 추적하여 요격임무 수행

정책해설 성과기반 군수지원 (PBL)

▣ 개 념

○ 주요 전투장비의 가동률 보장을 위해 업체와 장기계약을 맺어 그 수행성과(performance)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

* 성과기반군수지원 (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

○ 무기체계의 가동률 향상, 정비관련 병력·시설 감축을 목표로 美 제도 도입

▣ 현 문제점

○ 해외구매 및 주문제작의 형태로 조달기간 장기화

* 평균 조달기간(해외조달) : 상업구매(380일), FMS(231일), BOA(140일)

○ 무기체계 수리부속 확보 및 정비 애로 ⇨ 장비가동률 저하, 유지비 증가

▣ 추진경과

○ 新정비지원개념으로 성과기반군수지원 도입 검토 : 2006~2009년

○ 제도 시행기반 구축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정 등) : ~ 2010. 6월

○ 시범사업 추진(공군 KT/A-1, 해군 홍상어, 육군 UAV체계) : 2010. 3월 ~

○ 주요 무기체계 적용 확대(現 총 7개 사업) : 2011년 ~

* 공군 F-15K, KF-16엔진(운영유지) FA-50(방위력개선) 등

▣ 개선효과

○ 수리부속 조달기간 단축(평균 248일 → 55일)

구 분	수리부속 조달기간		증 감	계약업체
	PBL 前	PBL 後		
F-15K	427일	106일	△75%	美 보잉
F-16엔진	119일	17일	△86%	美 플랫&휘트니
무인정찰기	260일	36일	△86%	한국항공

○ 민·군 협력에 의한 안정적인 가동률 보장 및 후속군수지원 보장

○ 수리부속의 장기 미사용 방지 및 군의 재고수준유지 비용 감소

10. 외교·통일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외교·통일 분야 총지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0%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과 같은 국격 제고를 위한 지출이 계속 확대되어 온데 주로 기인한다.

아울러, 경제 영토 확대를 위한 한·미 FTA, 한·ASEAN FTA, 한·EU FTA 등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미·중·일 주요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과의 외교관계도 확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하였다.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정회원국 가입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 감소와 자립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실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 1조 4,667억원에서 2015년(잠정) 2조 1,655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ODA/GNI비율도 2011년 0.12%에서 2015년 0.14%로 증가하였다.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추이>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증가율
* 외교·통일 분야(조원)	3.7	3.9	4.1	4.2	4.5	5.0%

* 본예산 기준

G-20, 핵안보 정상회의 등을 통해 중심국가로 부상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폭 확대, 국제기구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함에 따라 주변국가에서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현저히 제고되었고 외교의 선진화를 구축하는 토대를 성공적으로 마련하였다.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 강화

정부는 그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추진하였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각 분야별로 총 37회의 남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남북관계 현안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였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현 정부 들어 두차례 상봉(총 633가족, 4,497명 생사 확인, 1,785명 상봉) 행사를 개최하였다.

드레스덴 구상 등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간단체를 통한 농축산 협력사업 지원(2014.9월), 개성만월대 최장기간(2015.6~11월) 공동발굴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민족동질성 회복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 공감대 확산를 위해 대학통일교육 강화, 통일박람회 및 통일문화주간 등 관련사업을 확대·추진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납북기념관 건립, 탈북민 정착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

북핵문제 진전, 재외국민 안전 및 권익보호, 공공외교 등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전략동맹 등 주변국과의 전통적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고, 미래 전략지역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자원개발의 신흥국 및 중견국에 대한 외교관계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및 재외국민 안전제고

700만 재외동포, 1,500만 해외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확대 및 이로 인한 재외국민보호 외교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외교의 영역이 정치·경제적 분야를 넘어 문화·공공외교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공외교에 집중적인 투자와 국민참여형 공공외교를 전개하여 한국 이미지 제고를 통한 우리경제의 대외진출 확대, 미·일·러·중·EU 등 주요국가에 대한 통일 공공외교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2015년 설치된 영사콜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해외대규모 재난발생시 자국민의 신속한 대피지원, 해외여행 안전관련 홍보 강화 등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서비스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테러,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외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제고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시대,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2015)를 승계하는 차세대 글로벌 개발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가

채택되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 기여에 적극 참여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MDGs(UN 새천년개발목표) 미완의 과제를 포함한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 개발재원 및 민간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맞추어 모범적 중견 공여국으로서 반세기만에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지원한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의 국제사회 공헌활동과의 연계 및 개발금융 등 민간 재원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드레스덴 통일구상 이행 지속지원

정부는「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드레스덴 구상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인도적 문제해결”, “민생인프라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7년에도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남북간 호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며, 학술·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 민간교류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통일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 증가율
□ **외교·통일분야**	46,791	46,081	47,367	48,685	50,037	1.7
○ 외교부문	31,498	33,270	33,902	35,111	36,350	3.6
○ 통일부문	15,293	12,811	13,464	13,574	13,687	△2.7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응한 외교역량 강화 추진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한·미·중 등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해 나가는 한편,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와 함께 남북간 실질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추진을 위한 관련국간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관계의 조화·발전과 함께 한·일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일본의 공세적인 대미 공공외교에 대응한 효율적인 역사·정책 홍보 추진을 위한 정책중심의 공공외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외교 및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전략을 통해 세계 각국과 문화 외교활동을 확대하고,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한편 한국에 대한 호감과 신뢰증진으로 한국에 대한 수용성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다.

▌다자관계 협력 강화 및 지역외교 협력사업 확대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G20(주요 20개국)·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의 범세계적인 이슈 대응에 기여할 것이다.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증대하는 글로벌 외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견국과의 외교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우리 국민 및 기업의 전략적·체계적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각 지역 국가 및 지역협의체와 실질협력

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여 우리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지역외교 협력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 및 일자리 외교 확대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최적화할 것이다. 비상시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한 수송체계도 마련하여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피·구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세계에 퍼진 재외동포 역량을 결집하고, 우리교육 및 문화를 재외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재외국민의 만족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기업 및 인력 진출과 연계한 상생형 ODA 집중지원

ODA분야는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문제 등에 따른 국제사회 지원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우리 기업 및 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을 동시에 도모하는 상생형 ODA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도국 경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연계되는 대개도국 차관 및 우리 우수기술 및 시스템 보급 사업을 중점 지원하며, 교원파견, 해외봉사단 및 ODA 인턴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개도국의 사회·문화 발전을 돕고 우리나라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실질적 통일준비 지속 강화

2017년에도 통일문화 활성화, 통일교육 내실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해결 노력, 탈북민 정착지원 등 실질적 통일준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과 문화를 접목한 통일박람회 개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사업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통일

열기를 계속 확산시키는 한편, 통일교육 선도대학,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강좌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탈북민 맞춤형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다양화하고 취·창업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여 유전자검사·영상편지 등 국내인프라 구축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기록·역사문화 보존사업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인권 개선 등 북한주민 삶의 질 향상 노력 본격 추진

2017년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의 원년으로 인권기록센터·인권재단 운영,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국제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산모·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보건 서비스를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경제협력 사업 규모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남북경협 분야에서는 4차 핵실험(2016년 1월)·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년 2월)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경제협력 예산 체계를 개편하고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경협분야 예산 규모가 축소·조정 되었으나, 북한의 태도 변화시 남북간 교류협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갈 계획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6년		'20년
▪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만족도(%)	83.0	⇨	85.0
▪ 對개도국 차관(억원)	8,797	⇨	9,259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사법, 치안, 재난관리 관련 투자로 2011년 13.7조원에서 2015년 16.9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 하였으며, 이는 동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연평균 5.0%)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도입,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강화, 전자소송 제도 도입, 112 범죄신고시스템 고도화 등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해 오고 있으며, 재해·재난 예방투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 공공질서·안전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1	'12	'13	'14	'15	연평균 증가율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조원)	13.7	14.5	15.0	15.8	16.9	5.5%

* 본예산 기준(추경 포함시 '13년 15.2조원)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강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험경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13년 3월부터 보호관찰소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이를 전국 보호관찰소로 확대하여 24시간 출동 체제를 마련하여 재범 방지를 강화하였다.

* '13년 26기관→'14년 40기관→'15년 46기관→'16년 56기관

또한 범죄자의 범죄 수법 및 이동경로 분석에 근거한 현장 출동,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한 대상자별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재범 억제를 위해 범죄예측시스템인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2017년 이를 완료할 예정이다.

난민 및 장기 체류외국인 지원 확대

난민법 시행(2013년)에 따라 본국의 박해로부터 피난하여 우리나라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권과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난민신청 시의 언어문제 해소 및 난민인정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난민전문통역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 재정착 난민 22여명, 2016년 하반기 30명 추가 수용 등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에 동참하여 국격에 맞는 난민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및 국내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원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외국국적 동포, 유학생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인 창업비자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창업이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내 장기 거주 및 영주자격 체류자에 대한 정착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간병비 등의 직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일센터·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의료·경제·법률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진술조력인·피해자국선변호사 등의 법률조력 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 지원 및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이전비·위치추적장치 지급을 통해 보복범죄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전자소송서비스 확대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5월 민사, 2013년 1월 가사·행정, 2013년 9월 신청, 2014년 4월 도산, 2015년 3월 집행·

비송 전자소송을 도입하는 등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에 있다. 소송문서 제출부담 감소, 소송비용 절감 이외에도 소송절차의 신속성, 편의성, 투명성, 안정성 제고 등이 그 장점이며 국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재판을 구현하고 있다.

범죄예방·수사 등 치안업무 과학화를 통한 현장대응역량 제고

112표준시스템을 고도화(스마트워크시스템 운용)하여 지역경찰이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112신고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심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지식을 갖춘 경찰서 내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운용하여 범죄현황 분석, 지역여론 청취, 지역사회 범죄 취약 요소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개선할 예정이다.

재해·재난 예방사업 투자 확충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대형태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지역의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2009년 이후 재해위험지역 및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 집중 투자하였다. 그 결과 재난피해 규모와 복구비 지출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 재난피해액 및 복구비 추이 >

구 분(억원)	'05~'09 평균	'10~'15 평균	비 고
예방투자	2,577억원	6,599억원	256.1% 증액
피 해 액	7,214억원	5,388억원	25.3% 감소 (1,826억원)
복 구 비	1조 3,421억원	1조 709억원	20.2% 절감 (2,712억원)

< 재해예방 인프라구축 재정투자 추이 >

구 분(억원)	'09	'10	'11	'12	'13	'14	'15
재해위험지역 정비	3,489	3,083	3,075	3,688	4,293	3,523	4,640
소하천정비	1,909	2,072	2,072	2,269	2,585	2,093	2,645
우수저류시설	148	384	388	557	690	655	881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

최근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발생으로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경력자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소년원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교정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력이 없는 심리치료명령대상자에게는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여, 불특정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확대

범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심리치료비 등 범죄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직접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일센터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전국적인 피해자 심리치료·상담·법률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진술조력인·피해자국선변호사 서비스 확충을 통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한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 도모

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차주택의 곰팡이·누수 하자 수선비 등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2017년 5월 전국에 6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임대차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 반환, 임차주택 유지·수선의무 등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 도모에 기여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 지원 강화

법률복지 제도의 증가에도 불구, 취약계층의 서민들은 빈곤, 무지, 신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기존의 법률 복지망을 이용하지 못하여 필요한 국가의 보호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률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법률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가의 법률복지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개선

법원은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여 각종 제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전자소송 확대, 판결문 공개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하여 전담 민원상담위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련 법적 분쟁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 신청서 등을 외국어로 번역·발간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손쉬운 법률서비스 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 치안활동 강화를 통한 국민불안 해소

112신고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지방청 112신고접수대 증설, 112노후 내비게이션 교체 등)하여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신속히 출동시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강력·집단범죄 및 이동성 범죄 등 발생 시 다수의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여 범죄에 대한 신속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와 현장 치안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대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 근무를 통해 경찰서 관할 내 취약지역 등 광역 순찰 전담, 강력·폭력범죄·재난 발생 등 112신고 접수 시 신속히 초동 대응하고 있다.

해양재난 현장대응역량 제고

원거리 해상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구조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 우선 2016년에 중형헬기 2대를 신규 도입을 추진하여 2019년까지 항공구조 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악천후에 조난신고 접수시에는 출동 및 구조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형 연안구조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현장구조능력을 제고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신설된 중앙특수구조단의 수중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등 구조장비 확충 및 잠수지원정 도입을 시급히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선박과 항공기가 해상에 침몰했을 때 정확한 사고 시각과 위치파악을 위해 중궤도 위성조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함정-지휘본부 간 원활한 실시간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을 위해 위성사용 대역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시스템 구축 및 안전인프라 확충

국민 생활주변 속의 안전위해 요소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의 지속 투자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노후 소방장비 보강, 안전시설 확충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재해 발생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신종감염병, 해상재난, 지진, 원전 등 대형·특수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 청소년, 공무원, 안전분야 종사자 대상 체험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질서·안전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공공질서·안전 분야	17,497	18,037	18,726	19,429	20,083	3.5
○ 법원및헌재	1,823	1,907	1,962	2,047	2,138	4.1
○ 법무및검찰	3,207	3,404	3,475	3,629	3,798	4.3
○ 경찰	10,147	10,419	10,964	11,332	11,726	3.7
○ 해경	1,277	1,204	1,199	1,291	1,339	1.2
○ 재난관리	1,044	1,104	1,126	1,129	1,082	0.9

(3) 중점 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화상공증시스템 도입

공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반드시 한 번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저조하였다.

이에 화상공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을 통해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촉탁대리 비용, 교통비용 및 시간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공증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도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증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화상공증시스템의 녹화, 녹음 기능을 통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편리하게 증거확보도 가능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이혼·임대차계약·범죄피해·임금체불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으나,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콜센터)'가 체류외국인과 마을변호사를 연결하여 이혼, 임대차계약, 범죄피해,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률상담 통역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체류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 대림동(연변거리), 광희동(몽골타운), 창신동(네팔거리), 경기도 안산시(고려인마을), 오산시(동포거주), 양주시(캄보디아) 등을 중심으로 동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 112신고 총력대응체계 안착

폭증하는 112긴급신고 및 사용자 확대에 따라 112통합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1초라도 빨리 출동할 수 있는 「112신고 총력대응」체계 확립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112신고 대응코드를 세분화(3→5단계)하여 긴급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112신고 시 U-city센터 CCTV 영상정보 활용을 통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강력·집단범죄 및 이동성 범죄 등 발생 시 다수의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여 범죄 신속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와 현장 치안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동순찰대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필요 시 여성안심구역·불법 풍속업소 밀집지역에 경찰인력을 집중 투입, 동시 단속 실시로 국민생활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 기동순찰대 확대 운영 : '14년 10개소 → '15년 30개소 → '16년 50개소

신형 연안구조정 일괄도입 및 노후함정 안전도 검사 추진

해양사고 중 인명피해 대부분이 발생하는 연안사고 대응을 위해 악천후에도 임무수행이 가능한 신형 연안구조정을 전국의 해경안전센터 중 해양 이용객이 많은 A·B급 64개 안전센터 중심으로 본격 도입 중이다. 특히, 신형 연안구조정 조기배치를 위해 일괄 계약을 지원함으로써 도입 완료 시기를 2년 이상 앞당겨 2020년까지 배치를 완료하여 인명·재난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노후 함정은 내구연한 도래 및 재원여건에 따라 대체건조를 추진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전문 공인기관의 선박 안전도 검사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절감 및 안전 위험에 노출된 노후 함정이 우선 교체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해경함정 건조 및 노후함정 교체 추진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재난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해경함정 및 연안구조장비 도입을 지원 한다. 이를 위해 3천톤 1척을 신규건조하고 중·소형함정 7척, 유류바지선 6척, 유류방제정 4척 등의 대체건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NLL 해역에서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불법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전담 500톤급 중형함정 3척과 중형방탄정 2척을 추가 건조 배치하여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전한 국민보호 역량 제고 및 소방안전분야 투자 효율화

안전신문고 홍보 강화 등 인지도 제고를 통해 국민 생활주변의 안전 취약요인에 대한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고, 접수 상황을 즉시 조치토록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전반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체계적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 소방관들이 아동·학생 등을 대상으로 재난상황 시 대처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업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정책별, 산발적인 사업 추진방식으로 효과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감안, 사업간 상호 연계하여 집중력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안전의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종감염병, 지반함몰, 화학사고, 사이버테러, 원전사고, 지진 등 대형·특수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원인조사·분석·평가 및 협업 체계 구축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특수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방 및 해경 특수구조대 운영을 통하여 골든타임내 신속하게 현장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대응 공조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지표로 본 5년 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16		’20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율(%)	7.6	⇨	7.4
▪ 범죄피해자 지원 만족도(%)	86.4	⇨	87.2
▪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동종재범률(%)	2.1	⇨	2.0
▪ 맞춤형 교정교화프로그램 만족도(%)	77.5	⇨	78.3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율(%)	19.8	⇨	40.4
▪ 주택임대차 조정구조 수혜자 수(명)	-	⇨	24,887
▪ 외국인마을변호사 지원 수혜자 수(명)	-	⇨	6,000
▪ 해양사고 인명구조율(%)	97.5	⇨	97.7
▪ 소방차 5분이내 현장 출동율(%)	70.0	⇨	86.0

▣ 추진배경

○ 기존 전자공증시스템 내에 화상공증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국민들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도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공증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과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

○ 웹캠 등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화상을 통해 직접 공증인과 대면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공증서비스 이용 가능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IT기기들을 활용한 화상 공증서비스 도입 추진

▣ 기대효과

○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시간적 낭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연간 20만 건 화상공증 이용 시, 약 10억원의 교통비용 절약

○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동) 주민들의 공증 접근성 향상

○ 화상공증의 녹화,녹음 등 데이터보존 기능을 통해 향후 분쟁 발생시 증거확보 등 효과적 대응 가능

▣ 추진배경

○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재한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여 외국인 인권보호 및 법질서 준수 유도

▣ 주요내용

○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사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담당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역내 외국인에게 이혼, 임대차계약, 범죄피해, 임금체불 등 법률상담을 지원

○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에서 3자통화 시스템을 통해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 내용을 20개 언어로 통번역 지원



▣ 기대효과

○ 임금, 주거지, 가족관계 등 다양한 생활법률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

○ 올바른 절차 안내를 통해 법적분쟁을 조기에 해소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감 조성으로 사회불안요소 해소

▣ 추진배경

○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수색구조역량 강화 필요

< 세월호 사고 전·후 해양환경 변화 추세>

관심분야	광역해역(EEZ) / 해양주권 수호	➧	**연안해역 / 해양안전관리 · 수색구조**
주요업무	해양영토 수호, 불법어선 단속		**해양레저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 비어선 해양사고 중 인명피해 대부분이 연안사고에서 발생

* 최근 3년('13~'15년) 평균 비어선 인명피해 215명 中, 연안사고 사망 130명(60%)

▣ 주요내용

○ 연안사고 대응을 위해 악천후에도 구조활동이 가능한 신형 연안구조정 본격 도입

- 전국에 산재한 안전센터(93개) 중 해양이용객이 많아 사고개연성이 높은 A·B급 안전센터(64개)에 일괄도입으로 조기배치 추진

<연차별 확보 계획(척)>

구 분	목표	'15년	향후 소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 고
연안구조정	64	8	56	6	12	12	12	14	

▣ 기대효과

○ 연안해역의 골든타임 내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악천후 시에도 출동함으로써 국민생명 및 재산 보호

* 사고지점 5마일 기준, (기존) 12노트, 25분 소요 → (변경) 35노트, 8분 소요

○ 일괄 계약으로 설계·건조 및 조달 소요시간 단축, 조기도입 등 가능

○ 동일 유형의 구조정 도입으로 운용숙달 및 정비유지 애로 해소

▣ 추진배경

○ 해양영도 주권수호 및 해양재난(오염) 대응역량 강화, NLL해역 불법외국어선의 단속 강화

▣ 주요내용

○ 독도·울릉해역 해양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대형함정 1척, 서해 NLL해역 불법외국어선 근절을 위한 중형함정 3척 및 중형방탄정 2척 신규건조

○ 해양재난에서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색·경비·오염방제 임무수행을 위한 노후함정 13척 대체건조 및 방제정 4척 건조

* 총 23척 건조 추진(총사업비 4,360억원, 구조대보트 7대 별도 추진)

구분	계	3000톤	500톤	100톤	60톤급 방탄정	방제정	유류바지
척수(척)	23	1	8	2	2	4	6
예산(억원)	4,360	800	2,800	200	120	260	180
'16년 추경(억원)	275.2	56	193.8	1.0	4.0	7.8	12.6
'17년(억원)	477	80	280	15	32	52	18

▣ 기대효과

○ 울릉·독도해역 3000톤급 대형함정 1척 추가배치로 해양주권·해양치안 역량강화, NLL해역 불법외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한 전담 500톤급 함정 3척 및 중형방탄정 2척 추가 배치로 어민 피해 최소화

○ 유류방제정 1척 신규건조 및 노후방제정 3척 조기배치로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국민의 재신피해 경감

▣ 재해 예방·대응·복구 전 주기에 걸쳐 안전 혁신 뒷받침

○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투자 및 소방 및 해경의 현장 구조능력 제고를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

○ 신설된 「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안전처와 협조하여 안전예산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

▣ 재난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특수 재난에 대한 대비 강화

○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노후선박 교체지원 등 해상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철도, 항공 등 여타 대형교통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도 지속해 나갈 계획

○ 신종 감염병에 대해 검역시설 확충 등 상시적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원전·화학사고, 지반함몰(씽크홀), 지진 등 특수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

○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한 중장기적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치수능력 확충 인프라 투자를 지속

▣ 재해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한 안전인프라 확충

○ 안전신문고 등 상시적 안전점검으로 위험도가 높은 재난취약시설 보수·보강에 우선투자 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 지방하천, 소하천, 생태하천, 우수저류시설,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유사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예방효과 제고와 투자 효율화를 도모

▣ 안전산업 육성과 국가·지자체·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 안전 R&D, 재해보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투자를 촉진하며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지자체의 필수 안전 인프라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1) 그동안의 재정투자 분석

정부는 그동안 지방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2013년부터 중점 추진해 온 정부핵심과제인 정부3.0의 성과 창출 및 공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일반·지방행정분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3% 증가하였다.

<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추이 >

	'11	'12	'13	'14	'15	연평균 증가율
· 일반·지방행정분야(조원)	52	55	56	57	58	2.3%

2011년도 및 2012년도에는 유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완화시켰다.

2013년에는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6%→11%)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 과세화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였다. 2014년에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재원조치를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에 사회복지 수요 반영 비율을 상향 조정(보통교부세 20%→23%, 부동산교부세 25%→35%) 하였으며, 특·광역시 본청이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통해 복지비 부담이 많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켰다.

정부3.0 사업은 정부운영방식을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혁신으로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에 행복출산·안심상속 등 맞춤형서비스 활성화, 행정·공공기관의 정보공유 확대, 국가중점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등을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은 민원 24처럼 통합민원서비스 등 다수 부처가 연계·협업하는 과제와 안전·복지 분야 등 국정 현안과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민원 발급과 통합민원서비스,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경제적 효과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생산하는 업무지식의 독점·사유화를 방지하고, 대국민 공개 및 기관 간 공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개인PC의 자료를 공유하는 클라우드 저장소 시범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통합 시스템 공통기반 구축을 추진하였다.

유연근무와 출장 시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중앙부처·국회·지자체간 영상회의시스템 연계, 이동·출장 중에도 업무 자료 및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을 개발·보급 하는 등 정부 내 소통·협업 촉진 및 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구현하였다.

또한, 한시적으로 구축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정보시스템 정비를 추진, 해당시스템 폐기·통폐합으로 정보화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공공분야의 정보자원 현황을 등록하여 기관간 공동활용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대통령 중남미 순방시(2015년 4월) 한-페루 등 MOU 체결, 동남아지역 수출거점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2016~2018년), 전자정부수출 2015년 5억불 초과달성 등 능동적 국제협력 추진으로 세계 1위 글로벌 위상을 정립하였다.

기부 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기부금품 관련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 국토의 불균형발전에 의한 소외·낙후지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꾸준한 예산투자로 2010년 이후 특수상황지역(접경, 도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2015년 특수상황지역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만족도가 83.3%로 2014년에 비해 0.8%p(2014년 82.5%) 증가하였다.

정부청사에서는 입주부처 대상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정기적 운영지원과장 회의 개최로 입주부처 공무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근무환경 개선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휴게시간 및 퇴근이후 스트레스 해소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입주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편의 증진을 추진하였다.

안전한 기록물 관리를 위해 2004년 생산된 보존기간 30년 이상 전자기록물을 본격 이관하고, 대통령기록관 세종시 신청사를 준공·이전 하는 한편,「2016 세계기록총회」개최를 위해 연례회의, 집행이사회 등에 참석·홍보 및 홈페이지 개설 등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한 기록관리 분야 행정한류 기반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행정연수원에 글로벌리더과정을 신설하여 전자정부·새마을운동 등 행정한류 확산과 한국 지방정부시스템의 실질적 파급을 위하여 태국·인도네시아·몽고 등의 개도국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강의, 세미나, 현장방문의 융합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중점

국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나라, 정부3.0 추진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하여 정부3.0 생활화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 및 분야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완결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확산하여 국민 편의를 더욱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다수기관의 협력적 과제가 대두하고 IoT(사물인터넷), AI 등 최신 ICT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3.0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안전·복지·보건 등 사회적 주요 현안의 해결에 빅데이터 분석, 정보공유, 기관 간 협업, 최신 ICT 기술 활용, 국민참여 등 정부 3.0 방식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분산된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관 간 칸막이 없는 공유·협업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며, 모바일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영상회의·스마트워크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효율적 행정환경을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부3.0 서비스 및 성과를 국민들이 인지하여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홍보도 강화하고, 국제적 이미지 제고 및 대외협력 강화 등을 위한 정부3.0 글로벌 브랜드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에 선도

전자정부 사업은 다부처 연계, 대규모 사업, 사회 현안 해결 등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며,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전자정부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주요 전자정부시스템을 차세대 전자정부서비스로 전환하는 등 전자정부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및 전자정부 해외 진출 확대

범정부 영상회의 생활화를 통한 정부 협업·소통 촉진 및 정부효율 극대화를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활성화 등으로 시공간 제약 없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기기로 주요 정부서비스를 이용토록 전환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3개년 계획 수립·추진 및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추진 등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2016년 UN 전자정부 평가(한국 3위)를 계기로 영국·호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등 제2의 도약을 추진하고, 전자정부 수출 3개년 계획 수립·추진 및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권역별 수출 전진기지로 확대·발전시켜 전자정부 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참여율 제고 지원

2017년 12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위법행위 예방・단속 및 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한 투표편의 확대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도입된 사전투표・선상투표 및 재외선거의 안정적 정착과 장애인 유권자 등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표편의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등 지역발전사업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2011년도에는「접경지역지원특별법」전면개정을 통해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밖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종합계획',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등에 따라 국가 안보·지리적 여건상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접경권(강원·경기·인천 등 15개 시·군)발전 지원, 서해 5도 발전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등 각 지역의 특수상황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속 지원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2011년)한 이후 지역경제 여건, 도시계획 등 주변 상황이 변화되었고, 사업타당성 결여 등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한 세부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내외 여건변화, 개별사업 추진실태 분석, 신규사업 발굴 등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방향과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추진, 시행할 예정이다.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23일) 이후 추진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또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여건변화로 인한 변경 필요에 따라 기존 종합계획의 보완·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사 보안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

광범위한 청사 운영상 대테러 및 무단침입에 노출되어 있어, 얼굴인식 출입시스템 구축 및 민원인 접견실 설치 등을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의 출입은 편리하게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보안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4단계 이전 완료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 개선 등 입주부처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체계적인 기록관리 추진

전자문서, 행정정보데이터, 웹, 디지털시청각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에 대한 기록관리 투자를 강화하고, 국가적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해외·민간 기록물 수집·정리를 통한 기록물 관리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보존성이 취약한 근·현대 기록물 및 필름·테이프 등의 보존·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지방핵심인재 양성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업무 해결능력 배양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원 및 교육훈련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기에 수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바람직한 공직자 상 정립을 위한 공직가치교육, 현대사교육 및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3.0, 지방규제개혁 등의 국정 주요 핵심과제 전문과정을 확대·개편하고, 행정한류 확산을 위한 관련 교육을 정비할 계획이다.

< 일반·지방행정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일반·지방행정 분야	595,167	639,024	669,016	695,583	734,566	5.4
○ 지방행정재정지원	382,624	414,478	430,300	455,791	477,585	5.7
○ 입법 및 선거관리	12,219	11,664	10,932	9,593	13,592	2.7
○ 국정운영	5,366	5,365	5,607	5,714	5,880	2.3
○ 재정·금융	167,193	178,271	186,129	196,091	207,500	5.5
○ 정부자원관리	7,188	8,641	10,504	7,037	7,072	△0.4
○ 일반행정	20,576	20,605	20,544	21,357	22,937	2.8

(3) 중점사업 및 제도개선 과제

교부세 제도 개편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지방교부세 제도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사회복지 등 관련수요를 확대 반영하고, 세입확충·세출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광역-기초단체 간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감면율을 2017년까지 1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2016년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1.9조원 규모에 대해 감면 재설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모성·낭비성 행사·축제 등 낭비성 지출를 억제하기 위해 행사·축제 예산총액 한도제를 도입하고, 민간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절약한 예산은 지역 명품축제, 농산물축제 등에 활용하거나,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달성할 것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3.0 추진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가치·고수요 대용량 데이터를 국민 주도로 선정하고 데이터 품질개선 및 실시간 제공 서비스(오픈API) 구축 등을 통하여 집중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활용도가 낮은 공공기관의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 등을 통해 민간 창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역량교육 체계 마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제8조의 5,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신설)과 지자체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도입 확대 추세에 맞추어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허브기능 수행, 현업에 적용가능한 지방공무원의 실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2020년까지 직급별 역량교육 프로그램 개발(모의과제 Pool 확보), 전·현직 지방공무원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역량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도 교육원과 공유·협업할 예정이다.

(4) 지표로 본 5년후 미래상

<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 >

구분	'16		'20
▪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33	⇨	70개 분야
▪ 중앙부처·지자체 영상회의 이용현황	472,363	⇨	691,586명

제 5 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제5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1.「재정건전화법」제정 추진

1)「재정건전화법」제정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최근 구조적인 저성장 추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재정환경이 질적·구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재정운용제도를 통해서는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의 실효적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해 12월에 발표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결과, 현 제도가 지속될 경우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바 있었다. 사회보험의 경우, 적립금이 고갈되는 등 대부분 전망기간 내 지속가능성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일반재정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이 있을 경우에만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기존 재정운용 관련 법령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 공공기관별로 상호 분절적으로 구성·운용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시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 및 경제사회구조 등 재정환경의 추세적 변화에 부응하면서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새로운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모든 재정활동 참가자들에게 적용되는 재정규율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2)「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주요 내용

재정준칙 도입

정부는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재정위험 및 외국사례 등을 고려한 채무준칙을 통하여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도 수지준칙을 통하여 매년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정운용 주체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각 재정운용 주체별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책임성이 제고되고, 중장기 미래 재정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재정전망 강화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의 절차 및 방법, 주기 등에 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험의 경우,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 사회보험별로 상이한 전망주기를 통일하면서 장기재정전망과 연계하여 추계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2.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1) 지출 구조조정

(1) 추진 배경

그간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정사업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점차 늘어나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추진 방향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재량지출 구조조정 실시

한정된 재원여건을 감안,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주요 국가정책은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각종 외부 평가에서 지적된 성과 미흡 사업, 집행 부진 사업, 유사·중복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투자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일자리 사업,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필수 신규사업 소요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통합 재정사업 평가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

2016년 새로 도입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와 연장평가를 통해 사업 진입·퇴출 관리를 강화하였다.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고, 3년 이상 보조사업은 연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 효과가 검증된 보조사업만 신규로 반영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폐지 및 감축하였다.

2) 유사·중복 통폐합

(1) 추진 배경

2014년부터 2015년까지 689개를 통폐합하여 경제혁신 3개년 목표 600개를 기달성하였으며, 2016년에도 지출효율화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4대 중점분야*를 위주로 유사중복 통폐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다문화 가족 지원, 대학 R&D,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2) 추진 방향

2016년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 대학 R&D,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4대 중점분야를 위주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14~2015년간 통폐합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를 추진 중이다.

2016년 주요 유사중복 통폐합 사례

① **고용장려금 관련 15개 사업**을 2017년 7개로 통합하고 2019년까지 3개(고용유지·창출·안정장려금)로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수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비용 축소

-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정규직전환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등 목적이 유사한 고용안정지원 사업 ⇨ **고용안정장려금사업으로 통합**

- 고용촉진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장년고용지원 등 고용창출 지원사업 ⇨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

②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산불방지대책 등 별도로 실시하던 일자리 사업 ⇨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일원화**

③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고용부(취업사관학교)가 유사한 별도의 지원사업을 각각 운영

⇨ **여가부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취업사관학교간 시너지 효과 제고

④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창구가 농업진흥청(다문화가족 상담사랑방)과 여가부(다누리 포털 운영)로 각각 운영

⇨ '다문화가족 상담 사람방'사업 일부를 '다누리 포털 운영'사업으로 통합하여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편의성 제고

⑤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이 대상별로 미래부(중·고등학생 및 성인)와 방통위(유아·초등학생)로 각각 운영되어 비효율 발생

⇨ 방통위로 교육창구를 일원화하여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컨텐츠로 사이버인성 및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실시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1) 추진 배경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적기 인프라 보급 및 재정 보완

지난 수십년간 정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에 힘입어 도로, 철도 등 주요 국가기간망은 지속 확충되어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체육관, 대학교 기숙사, 공공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프라 수요가 지속 제기[1]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향후에는 국가기간망의 노후화를 대비한 개·보수 문제도 조만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맞춤형 복지, 청년 일자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복지관련 예산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계획은 오히려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2]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투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 등도 민자사업이 공공부문 투자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민자사업을 통해 지난 20년간 690개, 104조원 규모의 인프라를 마련하여 물류비 절감, 혼잡완화 등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고 경제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이 중 정부의 건설보조금은 21조원에 불과하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전후 민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

1) 2005~2015년 기간동안 R&D 분야를 제외한 예비타당성조사 요청사업 건 수 1,085개

2) '15~'1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보건·복지·고용 부문은 연평균 5.0% 증가, SOC 부문은 연평균 6.8% 감소.

(2) 추진 방향

신규사업 적극 발굴 및 기존사업 이행 강화로 민간투자 촉진

정부는 한동안 침체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BTO-rs*, BTO-a**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사업대상도 확대하여 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자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 규제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민자사업 참여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 BTO-rs : Build · Transfer · Operate - risk sharing (위험분담형 BTO)
** BTO-a : Build · Transfer · Operate - adjusted (손익공유형 BTO)

이에 따라 대책발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구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천안평택 고속도로, 평택-오송 고속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한 민자사업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타 사업에 미칠 영향, 재정부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천-오산 고속도로, 봉담-송산 고속도로 등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행관리 · 점검을 통해 조속한 착공 및 조기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BTL을 활성화하여 지역·중소기업의 민자사업 참여 확대

민간투자사업이 점차 대형화되면서, 지역 및 중소 기업이 민자사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및 중소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BTL을 활용한 사회인프라 확충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청사, 물 관리, 복지 및 안전시설 등 사업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필수적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제안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2015년 4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 BTO-rs(위험분담형, Build · Transfer · Operate - risk sharing)

- 정부가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분담(예: 50%)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도 인하)

○ BTO-a(손익공유형: Build · Transfer · Operate - adjusted)

-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만 정부가 보전(초과이익 발생시에는 이익을 공유)하여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

* 예시) 민간투자비의 70% 및 운영비

2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2016년 3월, 민간투자법 개정)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을 허용

○ 공공청사,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도 사업대상에 포함

3 규제 완화

○ 건설기간 중에는 사업시행자의 대기업 계열사 편입을 제외(2016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당초 20%에서 15%로 완화(2015년 4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 기간단축을 위해 경쟁적협의*, 절차간소화 등의 도입근거를 마련(2015년 4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 복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쟁점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자 선정 이후 협상기간을 대폭 단축

4 정부지원 강화

○ 사업시행자에 대한 영세율 일몰을 당초 2015년에서 2018년으로 3년 연장(201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산업기간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 한도를 당초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2015년 10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3. 세입기반 확충

1) 비과세·감면 정비

(1) 추진 배경

국세감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국세감면율은 2009년 15.8%를 기록한 이래 2016년(추정) 13.6%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감면규모는 연간 36조원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결과이다.

< 연도별 국세수입 및 국세감면 추이 >

(단위 : 조원, %)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추정)
• 국세수입 (전년대비 증감률)	164.5 (△1.7)	177.7 (8.0)	192.4 (8.3)	203.0 (5.5)	201.9 (△0.5)	205.5 (1.8)	217.9 (6.0)	232.7 (6.8)
• 국세감면액 (전년대비 증감률)	31.1 (7.9)	30.0 (△3.4)	29.6 (△1.3)	33.4 (12.8)	33.8 (1.2)	34.3 (1.5)	35.9 (4.6)	36.5 (1.7)
• 국세감면율*	15.8	14.4	13.3	14.1	14.3	14.3	14.1	13.6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국세감면액)

** '12년부터 국세감면액에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등 3개 항목(4.3조원) 추가

감면혜택은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주로 귀속

국세 감면으로 인한 혜택의 약 63%는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돌아가며, 고소득층·대기업의 수혜비중은 약 37%이다.

(2) 추진 방향

조세지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성 제고

정부는 비과세·감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며, 조세지출 신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3년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연간 조세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2015년부터 일몰이 도래하거나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지출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6개의 심층평가 과제와 2개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제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평가결과를 201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1] 하였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소관부처의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를 하며,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등의 조세지출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

2) 지하경제 양성화

(1) 추진 배경

그간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부는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확대, 탈세신고포상금 확대, 역외탈세에 대한 부가제척기간 연장 및 가산세 인상,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시행 등 과표 양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2016년에는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며, 역외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해 국외전출시 주식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추진 방향

제도개선과 세정강화 병행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정착, 성실신고 확인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발급 확대 등 세원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분석 강화를 통하여 탈세·은닉재산 추적 등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BEPS(세원

잠식과 소득이전) 대응을 위해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을 강화하여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거나 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거나, 중소상인·서민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다.

3) 과세기반 확대

(1) 추진 배경

▌그간의 과세기반 확대노력

정부는 그동안 세입확충을 위해 과세기반 확대노력을 지속해왔다.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였으며,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축소하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였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이 도래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재설계하는 등 금융소득 과세기반 확대를 추진하였다.

(2) 추진 방향

▌세목별 과세기반 확대 지속 추진

2014년부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에 따라 저소득자의 공제혜택이 늘면서 면세자 비율이 크게 증가(2013년 32% → 2014년 48%)하였

으므로 소득세 공제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파생금융상품을 과세전환하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4)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1) 추진 배경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소유로, 2013년 관리주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한 이후 체계적으로 위탁·관리되고 있으나, 행정재산(국유재산의 87%)의 경우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태파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재산 실태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국유재산(토지·건축물) 현황 >

(단위 : 만필지, %, ㎢)

구 분		필지	비중	면적
행정재산	일반회계	356	67	21,579
	기금·특별회계	109	20	1,131
	소계	465	87	22,710
일반재산	일반회계	65	12	791
	기금·특별회계	1	1	37
	소계	66	13	828
합계		531	100	23,538

한편, 공공청사 이전, 군부대 재배치 등으로 발생한 유휴지의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국유지 개발범위는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한정되어 있어 대규모 유휴 국유지의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휴 국유지의 효율적 개발 및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국유지 개발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성장세 둔화로 세수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보조금·출연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보조금(조원) : ('12) 46.5 → ('13) 49.2 → ('14) 52.5 → ('15) 58.3 → ('16) 60.3
** 출연금(조원) : ('12) 25.9 → ('13) 29.5 → ('14) 31.4 → ('15) 33.2 → ('16) 33.4

(2) 추진 방향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재산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그간 일반재산에 비해 실태조사가 미흡했던 행정재산에 대해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2016~2019년)이다.

이러한 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유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획재정부·조달청·한국자산관리공사·각 중앙관서 등이 재산활용현황 DB를 공유하고, 상호 협업하는 행정재산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통한 재정기반 확충

노후・유휴 행정재산 재배치 결과 발생하는 대규모 국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를 현행 건축행위 이외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까지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용지 및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이 복합된 토지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국유지의 가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여 건립하는 시설은 지분형태의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4. 재정관리체계 개선

1) 지방재정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1) 추진 배경

2013년 「중앙-지방간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6→11%)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하였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재정 여건이 호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운영 노력이 확산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지방세수(조원) : ('13) 53.8 → ('14) 61.7(+7.9, 14.7%) → ('15) 71.0(+9.3, 15.0%)
** 재정자립도 : ('13) 51.1 → ('14) 50.3 → ('15) 50.6 → ('16) 52.5%

다만,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여전히 선심성 복지시책사업, 낭비성 행사·축제 과다, 지방공공기관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간 세원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치단체 간 합리적 재원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추진 방향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해 시·군 조정교부금 및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형평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징수실적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지수 비중을 확대(20→30%)하는 한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에 전액 재배분하여 세수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수변동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추진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세입 중 일정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사전심사·사후평가 강화, 원가정보 공개 및 낭비사례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사·공단에 대해 유사 중복기관 통폐합,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등 혁신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책임경영체제 도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기관 남설 방지 방안 마련, 상시근로 300인 미만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등 경영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2)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1) 추진 배경

유·초·중등 교육 분야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총규모는 2015년 최종예산 기준 59.7조원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세입의 약 65%를 차지하는 교부금은 2015년 교부금 정산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다.

< 연도별 지방교육재정 규모 >

(단위 :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 총 계	52.4	55.1	57.8	59.7	60.3
▪ 교부금	39.1	40.9	40.7	39.4	41.2
▪ 지자체전입금	9.2	9.3	10.3	10.8	11.3
▪ 지방채	-	1.0	3.8	6.1	3.9
(누적채무)	(2.0)	(3.0)	(4.7)	(10.7)	(14.4)
▪ 자체수입 등	4.1	3.9	3.0	3.5	3.9

향후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예·체능 교육, S/W 교육 및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교육시설 안전 보강 등의 재정 수요 증가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추진 방향

▌지방교육정책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요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미편성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교육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목적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특별회계 세입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통해 마련하고, 세출은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 지원 등 전국 공통으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에서 지자체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내실화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협의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협의사항 준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예산·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평가 및 정보공시 확대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기존 시도교육청 평가를 정책·행정 평가와 재정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 사이트를 개설하여 시도교육청의 재정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시도교육청의 재정 효율화 노력을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재정정보공시 사이트)에 쌍방향 소통기능을 추가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재정 인센티브 총액(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잔액)의 30% → 50%

3)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1) 추진 배경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우리 국민의 노후·건강·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7대 사회보험(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및 건강·고용·산재 보험)의 장기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최근의 저성장 추세와 맞물려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15~64세 인구: ('16년) 3,704만명(정점) → ('60년) 2,186만명('16년 대비 59%)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나라도 2018년이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금급여 확대,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향후 사회보험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 ('00년)고령화사회(65세 인구비중 7%) →('18년)고령사회(14%) →('26년)초고령사회(20%)

이에 더해, 최근의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수익률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져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보험의 적립금 고갈시기도 당초 전망시점보다 상당히 앞당겨 질수도 있는 상황이다.

* 국민연금의 경우 수익률 1%p 하락시 기금고갈시기 5년 단축 예상

이와 같은 사회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속에서 지난 2016년 3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가 출범하였는데,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 추진 방향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실시

정부는 보험별로 상이한 추계 시기·가정 등을 통일하고 주요 변수들의 추계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상호 비교·검증 가능한 추계결과를 산출하여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4월 「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위원회」와 그 산하에 연금·보험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각 사회보험별 재정추계 모델을 점검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존 5년(단기), 70년(장기) 전망 외에 10년(중기) 전망을 신규 도입하여 전망결과를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사회보험별로 자산운용 역량이 상이한 상황에서 각 사회보험이 축적해 온 자산운용의 정보·경험·기법 등을 서로 공유하고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협의회」가 출범하였다. 앞으로 이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동향 공동조사, 공동 대체투자기회 발굴, 투자정보·기법 공유 등을 지속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보험별로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금흐름 특성에 맞도록 투자 상품을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도 병행하여 사회보험 여유자산의 안정적 수익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4) 공공기관 기능조정

(1) 추진 배경 및 경과

그 동안 공공기관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기간산업의 육성, 국토의 효율적 개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을 견인해왔으며, 의료보험, 공적 연금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해왔다.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이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하고 사회적 가치관도 권위주의에서 수평적 민주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과 업무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과 업무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재편하고 누적된 비효율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여 비교우위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설립 목적외 사업 등 기관의 비핵심 업무는 축소하며,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의 업무는 축소하는 한편 기관 경영의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2015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그 결과, 4개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고 52개 기관은 업무를 조정하게 되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광물·석탄공사 등 정상적 경영이 곤란한 기관들을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석유·가스 공사 등이 수행중인 해외자원 개발기능은 효율화하기로 하였으며, 전력 판매·가스 도입 등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고, 발전 5사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생태·생물 관련 4개의 공공기관을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다.

(2) 추진 방향

2015~2016년 발표한 기능조정 방안의 이행

정부는 이미 발표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및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의 기능조정 과제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 과제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산업진흥·보건의료 분야 기능조정 방안 마련

2017년에는 정책금융, 보건・의료, 산업진흥 분야를 대상으로 기능 점검을 실시하여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비핵심 업무의 축소,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의 축소·폐지, 독·과점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 등에 초점을 둘 예정이며, 최종안은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7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 · 환경 ·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 기본원칙 •
불필요한 기능↓
+
꼭 필요한 기능↑
유사·중복기능은 합치고
A1 A2 A
비핵심업무는 빼고
핵심
비핵심
민간 경합업무는 나누고
(민간개방 확대)
공공
민간
핵심업무는 배가 시키겠습니다
핵심업무
• 기대효과 :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
유사·중복기능 조정
생산성 제고
비핵심업무 축소
조직 역량, 핵심기능으로 집중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시장경제 활성화
경영 효율화
투명성 재무건전성 제고
• 조직변동 •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
기획재정부

5)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1) 추진 배경

공공기관 부채 급증

공공기관 부채는 연평균 40조원 내외로 증가해왔다. 2012년말 부채는 496.1조원으로 2007년 대비 2배로 증가, 2012년말 국가채무 443조원의 1.1배 수준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 재무상태는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2015년말 공공기관 부채는 505.3조원

2015년말 현재 공공기관 부채는 505.3조원으로 2014년말 519.7조원 대비 14.4조원 감소하였다.

< 공공기관 부채, 부채비율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11	'12	'13	'14	전년비	'15	전년비
전체 공공기관*	460.3	496.1	520.4	519.7	△0.7	**505.3**	**△14.4**
	196%	220%	217%	201%	△16%p	**183%**	**△18%p**
·공기업	328.7	353.2	373.7	377.1	3.4	365.0	△12.1
	192%	207%	214%	207%	△7%p	194%	△13%p
·준정부기관	120.6	131.2	135.1	130.2	△4.9	125.6	△4.6
	248%	335%	283%	227%	△56%p	184%	△43%p
·기타공공기관	11.0	11.7	11.6	12.4	0.8	14.7	2.3
	72%	72%	65%	65%	-	73%	8%p

* 323개 전체 공공기관 중 은행(산은, 수은, 기은)[1]을 제외한 320개 기준

1) 은행 '15년 재무현황(자산, 부채, 조원) : 산은(309.5, 275.5), 수은(82.5, 71.4), 기은(239.8, 222.5)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이후 매년 증가해 오다가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00%를 하회하였다.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013년 12월)으로 추진한 경영효율화, 비핵심 자산 매각, 사업 조정 등 부채감축 노력 성과가 가시화된 결과이다.

(2) 추진 방향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정부는 2014년부터 경영효율화·비핵심 자산 매각·사업 조정 등을 중심으로 부채감축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중이다.

2016년에는 2014년에 마련하여 추진 중인 부채감축계획을 2014년, 2015년 실적 및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향후에도 부채감축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부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자산매각위원회 운영으로 원활한 자산매각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별 부채감축 이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부채감축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2016~202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도 부채감축계획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주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 18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부채관리의 제도적 기반 강화

공공기관 사업·조직 등의 단위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위별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체계인 구분회계 제도는 기존 13개

시범기관(1·2차)에서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으로 전면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6년 9월 시행예정)을 통해 그간 지침으로 운영되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정 제도화하여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5. 재정누수 차단

1) 집행현장조사제 실시

(1) 추진 배경

정부는 그동안 매월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재정사업의 다양한 비효율·부진사유에 대한 개별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2016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집행현장조사제'는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하에 집행현장의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정한 예산조치를 수반하여 궁극적으로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2) 운영 방향

▌분기별로 부처합동 '집행현장점검단' 점검

'집행현장조사제'에서는 분기별로 비효율·부진한 재정사업을 선정한 후 재정당국과 부처, 재정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위주로 사업을 점검한다.

현장조사 결과 발견된 비효율적·집행부진 사업 요소는 세출 구조조정, 제도개선안 등 해결책을 발굴하여 그 결과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다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일상적 집행부진 사업은 부처 책임하에 수시로 점검하여 즉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범사업 선정, 집행현장조사 실시

금년은 집행현장조사제 도입 첫해로 2017년도 본격운영을 위해 시범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3분기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4분기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3분기 대상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합동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부처 합동으로 집행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추진중이다.

집행현장조사를 통해 마련된 비효율적·집행부진 재정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안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확정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고, 필요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여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피드백을 통해 재정사업 효율화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 추진 배경

최근 보조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금 및 수급자 정보의 통합·연계가 곤란하여 보조금 전반의 정보공개나 부정수급 방지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 ('12) 46.5조, ('13) 49.2조, ('14) 52.5조, ('15) 58.3조, ('16) 60.3조

이는 국고보조금 예산·결산 정보를 관리하는 재원 관리·배분 시스템(dBrain, e-호조, 에듀파인)과 지급 대상자 자격검증 등을 위한 사업관리 시스템(행복e음, Agrix, e-CLEAN)이 별도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고, 상호 시스템간 연계가 미흡하여 유사·중복 보조사업이나 부정수급자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간 보조사업 관리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시스템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보조금 전체 정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공개하여 보조금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급자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추진 방향

▌중복·부정 수급 방지

우선 보조금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사업의 유사·중복을 검증하고,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으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신청시 자격검증을 통해 무자격자를 걸러냄과 동시에 수급자 종합DB관리로 보조금 중복신청(사전검증) 및 중복수급(사후검증) 여부를 조회하고, 국세청 및 카드사와 연계하여 집행증빙의 진위여부, 중복사용 및 사업자·거래처의 유효성 여부 등을 자동 검증하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단계의 부정발생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와 보조사업 위험요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부정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로 집중 관리하는 등 부정 징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과거 발생한 부정사례 패턴 분석, 보조사업 수행 중 통상범위를 벗어난 이상행동 분석, 부정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보조사업자 환경 분석 등

업무 효율성 제고

전자증빙에 기반한 실시간 지급관리, 업무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을 통해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용비목별 집행내역, 증빙정보 등을 온라인 관리(Paperless)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자동 생성되게 하는 등 기존 수작업 업무의 온라인 처리로 업무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 정산업무 소요시간 1~2주 → 사실상 제로화

정보 공개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조금 정보공개를 통해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보조금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교부 신청, 수입지출 내역, 정산 보고서, 수행 이력 등 보조사업자 정보를 보조금 시스템으로 공개하고, 부정수급자 명단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정보 등을 각 부처에 제공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수혜 가능한 보조금에 대해 조회・신청・진행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3) 통합 재정사업 평가(舊 재정사업 자율평가) 강화

(1) 추진 배경

분야별 칸막이식 평가체계의 개선 필요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며, 재정사업 평가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재정사업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하다.

그간 재정사업 평가는 일반재정, R&D, 지역발전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부처에서 소관 재정사업에 대해 '단위사업*' 단위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일반재정 분야는 기재부, R&D 분야는 미래부, 지역발전 분야는 지역발전위원회가 각각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미흡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의 10%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도록 하였다.

* (예산구조)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별 평가를 통해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출삭감을 통해 평가와 편성간 연계를 강화하였으나, 분절적 평가로 인해 평가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각 부처의 행정 부담은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분야별 평가체계가 상이하여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처 내 전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을 어렵게 함으로써 부처 단위의 효율적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과 평가-편성 간 합리적·유기적 연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단위사업에 대한 일률적 지출삭감 조치로 인해 성과가 우수한 '세부사업'까지 삭감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2) 추진 방향

평가체계 효율화

정부는 일반재정, R&D, 지역발전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는 재정사업 평가를 단일평가로 통합하여 재정사업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 중이다.

부처의 자체평가는 강화하되, 기재부·미래부·지역위 등 평가기관의 평가는 메타평가로 간소화하여 부처의 평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평가기관 평가시 재정사업에 대한 재평가는 지양하고 자체평가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중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재정운용기관의 자율성 · 책임성 제고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재정사업 운영에 대한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체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출구조조정 계획 또는 성과관리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부처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의 성과는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효과적 지출구조조정 달성을 위해 지출삭감 총액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내에서 성과에 따라 자율적으로 삭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환류체계 내실화

재정사업 평가의 통합을 통해 부처 단위로 재정사업의 성과 및 우선순위 판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평가결과가 예산편성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아울러, 평가-편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평가·편성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